

DJDI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김기희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서 문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은행 협력자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이 실제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신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유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책효과를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이차지원 보조금의 계속지원 및 상·하향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자금지원 및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대전광역시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한 정책지원금이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히 연구에 임해 준 연구자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대전광역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1. 5.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은행 협력자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이 실제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신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유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책 효과를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이차지원 보조금의 계속지원 및 상·하향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자금지원 및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그간 대전광역시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금에 대하여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평가를 시도하고, 나아가 기업입장에서 지원자금을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시도함.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

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2. 주요 연구내용

■ 자금지원 만족도

□ 자금지원 시책 및 규모에 대한 만족도

- 중소기업자금지원 시책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한다는 응답 71.0%
 - 운수업(95.0%), 서비스업(72.8%), 제조업(71.0%), 건설업(67.4%) 등
- 자금지원 규모의 충분성 : 충분하지 않음(32.0%), 충분함(26.5%)
 -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많음

□ 자금지원 효과의 크기 만족도 및 용자목적 사용 부합도

- 자금지원 효과의 크기 : 지원효과가 크다는 응답 76.9%
 - 운수업(90.0%), 제조업(79.2%), 제조관련업(78.8%), 건설업(74.5%) 등
- 지원금의 용자목적 사용 부합도 : 부합하게 사용했다는 응답 81.1%
 - 서비스업(87.2%), 제조업(81.9%), 제조관련업(80.9%), 운수업(78.9%) 등

■ 자금지원의 정성적 효과 분석

□ 자금지원이 생산에 미친 효과

- 대체로 크거나 매우 크다는 응답 67.2%
 - 업종별 : 운수업(77.8%), 제조업(74.2%), 제조관련업(60.0%), 서비스업(54.0%)
 - 규모별(2010년 기준) : 1~9인(70.4%), 10~49인(64.4%), 50인 이상(65.7%)
 - 연도별 : 2007년(68.1%), 2008년(67.3%), 2009년(67.7%), 2010년(67.1%)

□ 자금지원이 매출에 미친 효과

- 대체로 크거나 매우 크다는 응답 67.3%
 - 업종별 : 운수업(85.0%), 서비스(70.9%), 제조업(69.1%), 제조관련업(63.8%)
 - 규모별(2010년 기준) : 1~9인(71.8%), 10~49인(65.3%), 50인 이상(61.5%)
 - 연도별 : 2007년(65.8%), 2008년(67.6%), 2009년(68.1%), 2010년(67.8%)

□ 자금지원이 고용에 미친 효과

- 대체로 크거나 매우 크다는 응답 45.9%(효과가 전혀 없거나 대체로 작다는 응답 11.4% 불과)
 - 업종별 : 서비스업(48.1%), 운수업(47.3%), 제조관련업(46.7%), 건설업(45.9%)
 - 규모별(2010년 기준) : 1~9인(45.3%), 10~49인(45.7%), 50인 이상(59.0%)
 - 연도별 : 2007년(50.8%), 2008년(46.5%), 2009년(46.6%), 2010년(46.6%)

■ 자금지원의 정량적 효과 분석

□ 자금지원이 생산에 미친 효과

- 용자받기 1년 전과 용자받은 1년 후의 증감효과
 - : 1기업당 평균 생산액 4억 7,700만원 증가(증가율 22.3%)
 - 업종별 : 제조업(5억 5,400만원), 서비스업(5억 2,500만원), 건설업(2억 2,000만원, 제조관련업(1억 2,400만원), 운수업(1억 200만원)
 - 규모별(2010년 기준) : 1~9인(1억 2,300만원), 10~49인(6억 3,100만원), 50인 이상(13억 2,600만원)
 - 연도별 : 2007년(4억 9,600만원), 2008년(4억 9,000만원), 2009년(4억 6,500만원), 2010년(4억 7,000만원)

□ 자금지원이 매출에 미친 효과

- 용자받기 1년 전과 용자받은 1년 후의 증감효과
 - : 1기업당 평균 생산액 5억 5,400만원 증가(증가율 23.3%)
 - 업종별 : 제조관련업(7억 6,000만원), 건설업(7억 4,700만원), 서비스업(5억 7,700만원, 제조업(4억 9,400만원), 운수업(2억 3,600만원)
 - 규모별(2010년 기준) : 1~9인(1억 9,900만원), 10~49인(6억 1,900만원), 50인

이상(13억 3,400만원)

- 연도별 : 2007년(6억 7,800만원), 2008년(5억 6,800만원), 2009년(4억 9,200만원), 2010년(4억 9,300만원)

□ 자금지원이 고용에 미친 효과

- 용자받기 1년 전과 용자받은 1년 후의 증감효과
: 1기업당 평균 고용 증감 0명(변동 없음)
 - 업종별 : 제조업(1명 증가), 제조관련업(2명 감소), 건설업(1명 감소), 운수업과 서비스업(0명, 변동없음)
 - 규모별(2010년 기준) : 1~9인(0.1명 증가), 10~49인(3.6명 감소), 50인 이상(21.7명 증가), 전체로는 0.3명 감소
 - 연도별 : 2007년(3.4명 증가), 2008년(2.4명 증가), 2009년(0.3명 감소), 2010년(0.3명 감소)
-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신규인력(1기업당 평균인원)
 - 연도별 2007년 4.7명(정규직 3.2명, 비정규직 10.1명), 2008년 4.3명(정규직 3.5명, 비정규직 7.9명), 2009년 5.5명(정규직 4.3명, 비정규직 10.8명), 2010년 4.7명(정규직 3.6명, 비정규직 8.9명)
 - 업종별(2010년 기준) : 제조업 3.7명(정규직 3.8명, 비정규직 3.3명), 제조관련업 4.5명(정규직 3.0명, 비정규직 8.8명), 건설업 8.8명(정규직 2.8명, 비정규직 23.9명), 운수업 3.2명(정규직 2.8명, 비정규직 4.0명), 서비스업 4.4명(정규직 4.4명, 비정규직 4.0명)

□ 지원자금 활용 용도

- 업종 전체 : 원자재 등 재료비(37.7%), 시설자금(21.8%), 기술개발(13.8%), 제품생산(9.7%), 인력확보(8.8%), 판로개척 등 마케팅(3.5%) 등
 - 제조업 : 원자재 등 재료비(36.5%), 시설자금(21.1%), 기술개발(13.1%) 등
 - 제조관련업 : 원자재 등 재료비(31.3%), 시설자금(18.8%), 기술개발(14.6%) 등
 - 건설업 : 원자재 등 재료비(46.9%), 시설자금(15.9%), 일반관리비(13.1%) 등

- 운수업 : 시설자금(42.9%), 기타(17.9%), 원자재 등 재료비(14.3%), 판로개척 등 마케팅(14.3%) 등
- 서비스업 : 기술개발(25.5%), 인력확보(17.3%), 일반관리비(16.3%), 시설자금(15.3%) 등

□ 지원자금 인건비 활용 용도

- 업종 전체 : 기존인력 보전(65.0%), 신규 정규직 채용(27.1%), 신규 비정규직 채용(5.5%), 인턴사원 채용(1.4%) 등
 - 제조업 : 기존인력 보전(66.3%), 신규 정규직 채용(27.1%), 신규 비정규직 채용(4.6%), 인턴사원 채용(0.9%) 등
 - 서비스업 : 기존인력 보전(58.8%), 신규 정규직 채용(38.2%), 신규 비정규직 채용(0.0%), 인턴사원 채용(2.9%) 등
 - 건설업 : 기존인력 보전(70.4%), 신규 정규직 채용(25.0%), 신규 비정규직 채용(5.0%) 등

※ 고용 창출효과 분석결과의 유의점

- 위의 분석을 종합할 때, 지원자금의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왜냐하면, 위 지원자금의 고용에 미친 정성적 효과를 볼 때,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대체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더구나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지원자금의 혜택이 없었더라면, 구조조정에 의해 감축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자금으로 기존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고용을 지속하는 것도 일자리 유지로서 고용창출효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지원자금의 고용창출효과는 어느 정도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개선과제 (업체의 불만사항)

-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대출기간이 단기(30.1%)
- 지원자금 규모 부족(20.5%),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13.5%), 대출금리 높

- 음(11.2%), 자금지원 정보 부족(7.7%), 실적위주의 평가기준(7.0%) 등
- 제조업 : 대출기간이 단기(30.1%), 자금지원규모 부족(20.5%), 실적위주의 평가기준 평가기준(13.5%), 대출금리가 높음(11.2%) 등
- 서비스업 : 대출기간이 단기(28.5%),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17.8%), 자금지원규모 부족(15.1%) 등
- 건설업 : 대출기간이 단기(26.3%),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14.4%), 자금지원규모 부족(13.6%), 자금지원정보 부족(13.6%) 등

□ 시급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 운전자금의 확대(37.8%), 신용보증지원의 확대(20.7%), 시설자금지원의 확대(17.2%), 만기대출금 상환 연장(14.0%), 판로개척, 마케팅, 판촉 등 지원 확대(6.7%) 등
- 제조업 : 운전자금 지원 확대(38.5%), 시설자금지원 확대(19.7%), 신용보증지원 확대(17.0%), 만기대출금 상환 연장(14.5%) 등
- 서비스업 : 운전자금 지원 확대(40.9%), 신용보증지원 확대(28.8%), 판로개척, 마케팅, 판촉 등 지원 확대(13.6%), 만기대출금 상환 연장(9.1%) 등
- 건설업 : 운전자금 지원 확대(32.2%), 신용보증지원 확대(26.4%), 만기대출금 상환 연장(19.8), 시설자금지원 확대(12.4%) 등

□ 지원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한 우선배분 기준

- 사업전망(40.3%), 신용상태(33.8%), 기술성(13.7%), 기업경영능력(12.2%) 등
- 제조업 : 사업전망(45.5%), 신용상태(28.4%), 기술성(13.6%), 기업경영능력(12.5%)
- 서비스업 : 사업전망(83.3%), 기술성(16.7%) 등
- 건설업 : 신용상태(63.6%), 기업경영능력(18.2%), 기술성(9.1%) 등

□ 은행에서 자금대출시 개선해야 할 사항

-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 요구(36.6%), 대출금리가 높음(28.1%), 대출규모가 적음(13.0%), 담보평가비율이 낮음(6.9%), 거래절차가 복잡(6.8%) 등
- 제조업 :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 요구(35.1%), 대출금리가 높음(28.0%), 대출

규모가 적음(13.2%), 담보평가비율이 낮음(8.1%) 등

- 서비스업 :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 요구(45.7%), 대출금리가 높음(21.7%), 대출규모가 적음(11.6%), 담보평가비율이 낮음(5.8%), 거래절차가 복잡(5.8%) 등
- 건설업 : 신용대출 곤란 및 담보 요구(38.7%), 대출금리가 높음(29.4%), 대출규모가 적음(13.2%), 거래절차가 복잡(6.0%) 등

□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

-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41.8%),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자동화 등)(17.6%), 기술개발(16.7%), 기술인력 양성(7.1%), 창업지원(4.9%) 등
- 제조업 :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39.7%), 생산성 향상(19.5%), 기술개발(16.8%), 신규 설비투자(12.9%) 등
- 서비스업 :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40.8%), 기술개발(31.6%), 기술인력 양성(11.2%) 등
- 건설업 :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47.1%), 생산성 향상(16.7%), 기술인력 양성(12.5%), 기술개발(10.8%) 등

□ 자금지원 적정 규모

- ① 경영안정자금 : 2,000억(41.0%), 2,500억(30.7%), 1,500억(19.3%) 등
- 기업 규모별
 - 1~9인 : 2,000억(41.6%), 2,500억(30.7%), 1,500억(17.8%) 등
 - 10~49인 : 2,000억(38.8%), 2,500억(32.1%), 1,500억(20.3%) 등
 - 50인 이상 : 2,000억(51.4%), 2,500억(21.6%), 1,500억(21.6%) 등
- 업종별
 - 제조업 : 2,000억(39.1%), 2,500억(34.2%), 1,500억(19.7%) 등
 - 서비스업 : 2,000억(39.2%), 1,500억(21.6%), 2,500억(19.6%), 1,000억(19.6%)
 - 건설업 : 2,000억(48.2%), 2,500억(22.9%), 1,500억(22.9%) 등
- ②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38.5%), 700억(32.7%), 500억(23.6%) 등

- 기업 규모별 :
 - 1~9인 : 1,000억(39.5%), 700억(31.0%), 500억(21.5%) 등
 - 10~49인 : 1,000억(38.1%), 700억(32.7%), 500억(25.7%) 등
 - 50인 이상 : 700억(41.7%), 1,000억(36.1%), 500억(22.2%) 등
- 업종별
 - 제조업 : 1,000억(41.5%), 700억(32.1%), 500억(23.1%) 등
 - 서비스업 : 700억(34.0%), 1,000억(30.0%), 500억(26.0%) 등
 - 건설업 : 700억(37.0%), 1,000억(33.3%), 500억(25.9%) 등
- ③ 구매조건생산자금 : 400억(31.4%), 200억(31.0%), 300억(26.7%) 등
- 기업 규모별
 - 1~9인 : 400억(35.3%), 200억(29.4%), 300억(23.5%) 등
 - 10~49인 : 200억(31.1%), 300억(29.3%), 400억(28.9%) 등
 - 50인 이상 : 200억(38.9%), 300억(27.8%), 400억(25.0%) 등
- 업종별
 - 제조업 : 400억(36.7%), 200억(28.3%), 300억(27.3%) 등
 - 서비스업 : 200억(36.0%), 300억(28.0%), 100억(22.0%), 400억(14.0%)
 - 건설업 : 200억(37.0%), 300억(28.4%), 400억(25.9%) 등

□ 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

- 전체 : 재용자(횟수 제한 없이 용자 후 1년 경과후 재용자)(59.5%), 3회 제한(18.7%), 4회 제한(15.6%) 등
 - 제조업 : 재용자(61.7%), 4회 제한(17.9%), 3회 제한(14.7%) 등
 - 서비스업 : 재용자(59.3%), 3회 제한(27.8%) 등
 - 건설업 : 재용자(52.8%), 3회 제한(24.7%), 3회 제한(14.6%) 등

■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과제

□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조건

- 민간 금융과의 경합을 피하고 보완·협력관계 유지

-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간 중복지원 억제
- 간접대출 및 위탁보증의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

- 신용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탁보증제도 활용 확대
-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단순·체계화를 통한 역할 재정립
- 은행과 기업의 상생구조 정립
-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 벤처캐피탈, 팩토링 등 중소기업자금 공급원의 확충
- 창업자금 공급 확대 및 효과적 지원

3. 정책제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을 통한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및 지원 대상 합리적 조정

-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대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공급을 확대

□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정책자금별 사업목적과 지원방식, 지원분야 등을 차별화하여 성과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책자금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적정성, 분야별 균형 등 지원 원칙의 객관성과 형평성,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
-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예산의 전반적인 구성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자금의 실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자금의 사업적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
- 그리고 연차별로 목표와 지표를 도출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해당 전문

가를 양성하는 등의 지속적인 정책자금의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 또한 정책자금의 성과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측정과 입증의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임

□ 경기침체 시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

-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업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을 제고하는 방안과 융자조건 및 상환기간을 기업실정에 맞도록 다단계화 하는 방안 필요

□ 각종 지원서류의 간소화

- 기업밀착형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해 One-Process(원 프로세스) 대출체제 구축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계 지원

- 대전의 특화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즉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업종에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며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지원이 필요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 출자나 투자형태의 주식형 기술금융지원보다는 융자 등의 부채형 기술융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출자 및 투자형태는 민간 기술금융시장에서 조달될 수 있는 체제로 운영.
- 특히, 초기 R&D 보조금이나 개발자금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2차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연계된 자금의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신용대출기반 강화

-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협력은행의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용대출 관계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지역신용보증기관과의 MOU 체계를 통해 우량소기업 신용보증 차등화, 기업규모에 대한 이차보전을 차등화, 생산성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이차보전제도를 개선하여 다단계 차등지원제도로 개편

- 일반기업과 우수기업, 자금신청 횟수, 상환기간의 확대·연계 등 지원내용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고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구성	6
제2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현황	11
제1절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11
1. 중소기업 정의와 역할	11
2. 대전의 중소사업체 현황	15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제도 개관	21
1.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개요	21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스템	26
3.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필요성	31
4.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	33
제3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및 문제점	36
1. 자금운영 개요	36
2. 자금지원 현황	39
3. 자금지원상의 문제점 및 검토사항	46
제3장 자금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55
제1절 자금지원의 만족도 분석	55
1. 자금지원 시책 및 규모에 대한 만족도	55
2. 자금지원 효과의 크기 만족도 및 용자목적 사용 부합도	57

- 표 목 차 -

제2절 자금지원의 효과 분석	60
1. 자금지원의 정성적 효과 분석	60
2. 자금지원의 정량적 효과 분석	68
3. 자금지원이 고용 증감에 미친 사유 분석	83
제4장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89
제1절 지원시책 및 대출 관련 개선과제	89
1. 자금지원 시책 관련	89
2. 지원자금 대출 관련	94
제2절 자금지원 적정 규모 및 회수 개선과제	99
1. 자금지원 적정 규모	99
2. 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	104
제3절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과제	106
1.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조건	106
2. 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 개선	10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19
부록 : 설문지	123

< 표 2-1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	12
< 표 2-2 > 대전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6
< 표 2-3 > 대전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2009)	18
< 표 2-4 > 대전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2009)	19
< 표 2-5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23
< 표 2-6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2가지 지원방식	25
< 표 2-7 >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	37
< 표 2-8 > 자금지원 이율 및 실적	39
< 표 2-9 > 연도별 경영안정자금 용자 추진 실적	40
< 표 2-10 > 연도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용자 추진 실적	41
< 표 2-11 > 연도별 경영안전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실적	42
< 표 2-12 > 연도별 창업 및 경쟁력상화 사업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실적	42
< 표 2-13 >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43
< 표 2-14 >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현황	44
< 표 2-15 >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유형별 현황	44
< 표 2-16 >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 용자 추천금액별 지원현황	45
< 표 2-17 > 2010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유형별 현황	46
< 표 2-18 > 특·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내역	49
< 표 3-1 > 중소기업 자금지원시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5
< 표 3-2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의 충분성	56
< 표 3-3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효과의 크기	58
< 표 3-4 > 용자받은 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정도	59
< 표 3-5 > 지원자금 용자가 생산에 미친 영향(업종별)	60
< 표 3-6 > 지원자금 용자가 생산에 미친 영향(기업규모별)	62
< 표 3-7 > 지원자금 용자가 매출에 미친 영향(업종별)	63
< 표 3-8 > 지원자금 용자가 매출에 미친 영향(기업규모별)	64
< 표 3-9 > 지원자금 용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업종별)	66

- 그림 목 차 -

< 표 3-10 > 자원자금 용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기업규모별)	67
< 표 3-11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생산액 증감(업종별)	68
< 표 3-12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생산액 증감(기업규모별)	70
< 표 3-13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매출액 증감(업종별)	71
< 표 3-14 > 조사대상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증감	72
< 표 3-15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매출액 증감(기업규모별)	73
< 표 3-16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고용 증감(업종별)	75
< 표 3-17 > 조사대상기업의 업종별 고용 고용 증감(연평균인원)	76
< 표 3-18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고용 증감(기업규모별)	78
< 표 3-19 > 조사대상기업의 업종별 고용 증감(연평균인원)	80
< 표 3-20 >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신규인력	81
< 표 3-21 >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연도별 업종별 신규인력	82
< 표 3-22 > 지원자금의 활용 용도	83
< 표 3-23 > 지원자금의 인건비 활용 용도	85
< 표 4-1 >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불만사항	00
< 표 4-2 > 시급한 자금지원 정책	92
< 표 4-3 >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	93
< 표 4-4 > 지원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	95
< 표 4-5 > 은행에서 자금대출시 가장 불만인 사항	97
< 표 4-6 > 기타 건의사항	98
< 표 4-7 > 경영안정자금 적정 지원규모(기업규모별)	99
< 표 4-8 > 경영안정자금 적정 지원규모(업종별)	100
< 표 4-9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적정 지원규모(기업규모별)	101
< 표 4-1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적정 지원규모(업종별)	102
< 표 4-11 > 구매조건생산자금 적정 지원규모(기업규모별)	103
< 표 4-12 > 구매조건생산자금 적정 지원규모(업종별)	104
< 표 4-13 > 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	105

< 그림 2-1 > 지자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체계도	24
< 그림 2-2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27
< 그림 2-3 >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34
< 그림 2-4 > 경영안정자금 지원 흐름도	37

제 1 장 서론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근까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국가별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고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란 열악한 기업입지에서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압박, 인력난 및 임금상승,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불안, 판매부진 등 많은 경영환경 요인의 악순환 속에서도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 및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기회 확대를 통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및 양극화를 해소하며 경기 완충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를 매년 증가시켜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지원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은 부처별 유사·중복성 및 미흡한 집행실적 등의 사유

때문에 확대된 지원규모에 비해 정책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간 대전광역시에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된 정책지원금에 대하여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평가를 시도하고, 나아가 기업입장에서 지원자금을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자금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은행 협력자금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경영안정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이 실제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신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 유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책효과를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이차지원 보조금의 계속지원 및 상·하향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효과적인 자금지원 및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인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향후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활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얼마만큼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지원자금을 용자 받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광역시로부터 정책자금을 용자받은 약 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규모별 약 600여개 업체를 표본추출하여 정책자금 용자실적, 매출액, 인력현황, 신규 채용인력 등 일반 현황과 용자받은 지원금을 활용한 결과 생산, 매출, 고용에 미친 효과 등 정책자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정책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평가 관련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하여는 문헌조사자료를 활용하고,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실무부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자료와 기존의 문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0년 3월 24일 ~ 4월 6일 (토·일 제외 10일간)
- 조사대상 : 대전광역시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금을 용자받은 2,000여개 업체 중 규모별 업종별(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600개 업체
- 조사방법 : 전문 조사원 13명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표본 특성 (단위 : 개, %)

업 종	빈도	구성비	기업 규모	빈도	구성비
건설	89	16.6	1~9인	216	43.1
서비스	55	10.2	10~49인	246	49.1
운수	20	3.7	50~99인	25	5.0
제조	321	59.8	100인이상	14	2.8
제조관련	48	8.9	합계	501	100.0
합계	537	100.0			

업종별 / 규모별	1~9인	10~49인	50~99인	100인이상	합계
제조업	155	130	12	6	303
제조관련업	20	25	1	1	47
건설업	38	38	0	6	82
운수업	11	5	0	1	17
서비스업	15	29	7	1	52
합계	239	227	20	15	501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일반적 정의와 역할을 정립해 보고 이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제도에 관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의 개요와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대전광역시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자금지원 시책 및 자금지원 규모에 대한 만족도, 자금지원 효과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와 용자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본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이 업체의 생산과 매출, 고용에 미친 정성적 효과분석과 정량적 효과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앞의 평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시책 및 대출관련 개선과제, 자금지원 적정규모 및 경영안정자금 적정 지원 횟수에 대한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자금지원체계에 관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앞의 정책효과 평가분석 결과와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기초로 대전광역에서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 2 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현황

제 2 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현황

제1절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제도 개관

제3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중소기업의 정의 및 현황

1. 중소기업의 정의와 역할

1)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데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관련 법에서 규모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이 정부 시책과 관련하여 활용되고 있다.

먼저 규모 기준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제조업의 경우 상시종업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성 기준을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아울러 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가 50인 미만,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지칭한다. 한편, 소기업 중에서도 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상시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 표 2-1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 업종	범위 기준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 보험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사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주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중소기업의 역할1)

중소기업은 존립분야가 광범위하다. 즉, 중소기업은 대자본의 관련업종에도 참여하지만 제조업, 수송업,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분포하여

1) 본 부분은 박경일(2001), '중소기업경영론',의 12~15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대기업의 참여가 없는 부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존립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모가 큰 대기업이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독과점적 지배가 강하고 시장 및 가격의 경직성을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산업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이 형성되어 건전한 시장구조가 갖추어진다.

활력이 있는 다수로서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존재이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오늘날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고용, 생산, 소비, 소득,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하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은 왕성한 생산과 균형이 있는 소득분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산층을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 지역의 고용기회 창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고용 비중은 70% 이상 수준이다. 중소기업 개개의 고용규모는 대기업에 비하여 작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대기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 일할 기회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산자로서 중소기업의 존재는 지역주민에게 취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존재는 지역산업을 지탱하고 있

다. 중소기업의 쇠퇴는 지역산업의 쇠퇴이다. 그런 까닭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소비생활의 담당자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는 생산과 소비를 균형이 있게 순환시킴으로써 활성화된다. 특히 소비생활의 향상에 있어서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중소기업의 담당하고 있다.

(3) 지역경제발전과 전통기술의 계승

중소기업이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존재가치는 크다. 중소기업은 광역화되고 있는 지역의 경제발전의 담당자로서 지역의 균형이 있는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적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역은 지역산업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지역에는 독특한 전통문화나 전통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나 기술을 계승하는 것은 지역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후계자의 육성이나 인재확보 등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다. 국제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나 기술의 계승이 중요하게 된다.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능에 의해서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

(4) 대기업을 지원하는 하도급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원만한 유대관계와 독자적인 중소기업의 관계는 산업구조의 저변확대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에서의 전·후방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60% 이상이 하도급기업이 되어 있고 대기업과의 관계는 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전자,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한 가공조립형 중소제조업은 대기업을 지원하는 하도급분업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후퇴나 시장의 성숙에 의한 매출의 부진, 국제 유가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에 의해서 하도급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경영방침으로서는 다품종소량생산, 모기업의 분산, 자사제품의 개발에 의해서 문제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사업의 다각화,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시야에 두고 하도급업체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5) 기술혁신 담당자 역할과 벤처기업 창조

중소기업은 지역산업을 창조하거나 기술혁신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벤처기업은 정보사회의 도래를 계기로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은 경제의 서비스화를 계기로 일어나고 있다.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없애고,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산업의 새로운 조류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기를 넘어가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기대를 걸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독자기술, 신규 틈새시장, 기업가정신의 발휘에 의해서 벤처기업은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담당자로서 벤처기업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어, 신규사업의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가정신의 발휘의 장이 될 수 있다.

2. 대전의 중소사업체 현황

1)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위에서 정의한 중소기업범위 분류기준으로 대전의 중소기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여기서는 대략 종사자수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대전이 2009년 현재 총사업체수는 93,176개로 이 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수는 총 93,061개 사업체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 1~9인 사업체수는 86,787개 사업체로 전체의 93.1%를 차지하고 영세규모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사업체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0인 미만사업체의 구성비는 99.9%로 불변이지만, 1~9명 사업체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표 2-2 > 대전의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1~9명	85,205	86,376	86,787	186,766	190,638	191,985
10~49명	4,925	5,106	5,243	93,069	98,277	100,592
50~99명	596	666	700	40,726	45,744	47,649
100~299명	278	300	331	44,755	49,232	52,436
300명 이상	93	100	115	64,316	66,966	75,839
합계	91,097	92,548	93,176	429,632	450,857	468,501
	구 성 비					
1~9명	93.5	93.3	93.1	43.5	42.3	41.0
10~49명	5.4	5.5	5.6	21.7	21.8	21.5
50~99명	0.7	0.7	0.8	9.5	10.1	10.2
100~299명	0.3	0.3	0.4	10.4	10.9	11.2
300명 이상	0.1	0.1	0.1	15.0	14.9	16.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으로 2009년 현재 총종사자수는 468,501명으로 이 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는 392,662명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 1~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수는

191,985명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별 종사자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총근로자의 41%가 1~9인 규모의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다.

연도별 근로자수는 사업체수의 증가와 함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구성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성비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10~49인, 50~99인, 100~299인 규모 모두에서 종사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09년에 10~49인 규모의 종사자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50인 미만의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인 이상의 중규모 이상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산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대전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규모 전체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4,773개 업체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 17,153개 업체로 전체의 18.4%, 협회·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1,473개 업체로 전체의 12.3%, 운수업이 10,554개 업체로 전체의 1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대전의 주요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운수업 등 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산업생산의 역군 역할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 제조업은 6,295개로 전체의 6.8%에 불과하지만, 지식기반경제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의 구성비를 보면,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2.1%, 교육서비스업 5.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서비스업은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은 0.7% 등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역시 모든 산업에서 1~9인 사업체수가 대부분이고 이어서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수는 작다.

< 표 2-3 > 대전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2009)

(단위 : 명, %)

구 분	1~9	10~49	50~99	100~299	300이상	합계	비중
전산업	86,787	5,243	700	331	115	93,176	100.0
농업,임업,어업	4	1	0	2	0	7	0.008
광업	4	1	0	0	0	5	0.005
제조업	5,575	587	68	52	13	6,295	6.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	7	6	2	2	24	0.0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2	28	3	2	1	96	0.1
건설업	2,132	453	40	27	6	2,658	2.9
도매,소매업	23,822	867	52	29	3	24,773	26.6
운수업	10,323	144	59	24	4	10,554	11.3
숙박,음식점업	16,775	362	11	5	0	17,153	18.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62	174	23	18	0	677	0.7
금융,보험업	593	542	52	14	1	1,202	1.3
부동산업,임대업	3,026	293	15	3	3	3,340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628	247	31	29	20	1,955	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771	177	44	49	22	1,063	1.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31	123	33	26	24	237	0.3
교육서비스업	4,427	424	181	25	9	5,066	5.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865	479	52	17	7	3,420	3.7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3,108	55	10	5	0	3,178	3.4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11,172	279	20	2	0	11,473	12.3

3)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대전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규모 전체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74,460명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고, 이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48,929명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여 역시 전통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표 2-4 > 대전의 산업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2009)

(단위 : 명, %)

구 분	1~9	10~49	50~99	100~299	300이상	합계	비중
전산업	191,985	100,592	47,649	52,436	75,839	468,501	100.0
농업,임업,어업	19	10	0	309	0	338	0.07
광업	12	12	0	0	0	24	0.005
제조업	14,700	11,693	4,744	8,450	8,231	47,818	10.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39	192	395	286	1,447	2,359	0.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268	562	179	261	399	1,669	0.4
건설업	6,898	8,182	2,637	4,128	3,313	25,158	5.4
도매,소매업	51,061	14,705	3,362	4,383	949	74,460	15.9
운수업	11,617	3,615	4,192	3,798	2,024	25,246	5.4
숙박,음식점업	41,405	5,963	782	779	0	48,929	10.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766	3,543	1,648	2,686	0	9,643	2.1
금융,보험업	2,962	11,085	3,419	2,293	404	20,163	4.3
부동산업,임대업	6,109	5,634	1,013	347	1,097	14,200	3.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624	4,441	2,216	5,475	14,014	31,770	6.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117	4,039	3,040	8,141	10,515	27,852	5.9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132	2,764	2,202	4,523	18,801	28,422	6.1
교육서비스업	10,657	9,633	12,369	3,407	8,065	44,131	9.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2,010	8,300	3,544	2,197	6,580	32,631	7.0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771	1,159	637	625	0	8,192	1.7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18,818	5,060	1,270	348	0	25,496	5.4

대표적인 산업생산분야인 제조업에서는 47,818명이 종사하여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대전지역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서는 교육서비스업 44,131명으로 전체의 9.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631명으로 전체의 7.0%,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은 31,770명으로 전체의 6.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28,442명으로 전체의 6.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27,852명으로 전체의 5.9%를 각각 차지하여 비교적 여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산업이 경우 역시 1~9인 규모의 종사자가 가장 많고, 이어서 10~49인 규모, 300인 이상규모, 100~299인 규모, 50~99인 규모 순으로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1~9인 규모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 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 분야의 영세 사업체로 나타났고, 300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주로 대형 사업체로 이루어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전문·과학·기술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10~49인 규모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경우는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이며, 제조업의 경우 1~9인 규모의 종사자수가 가장 많지만, 100인 이상 규모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제도 개관

1.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개요

1) 지원근거 및 지원내용

(1) 근거법률

지방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률은 199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08. 3. 21 부분개정 법률 제8976호)'이다. 동법은 크게 2개의 장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의 법률적 개념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동법 제39조(기본지침) 내지 43조(육성계획의 추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추진절차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근거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지역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의 육성계획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을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판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법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에서는,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자금과 중소기업청장이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조성한 기금(매칭펀드)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 내용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종합센터 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지원사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창업 및 구조개선사업, 경영안정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 기타 시·도지사 및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시장재개발 지원 사업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의 지원대상은 제조업(전업률 30%이상), 소상공인,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거나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금의 지원대상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와 임시시장 설치자금 즉, 시장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임시시장 설치부지 또는 건물의 임차비 등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연 3% ~ 6%(변동금리)이며, 대출한도는 시설자금이 10억원, 운전자금이 3억원이다.

< 표 2-5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조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제조업·유통업·건설업·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	공장·부지매입비, 시설도입·개체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연구개발비 등	대출금리 : 3~6%(변동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 : 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시장재개발사업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재개발·재건축사업자금(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기반공사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임시시장설치자금(시장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건물의 임차비)	대출금리 : 3~6%(변동금리) 대출기간 : 재개발·재건축사업 자금-15년내(거치기간 5년 포함) 임시시장설치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 : 재개발·재건축사업 자금 100억원, 임시시장설치 자금 5억원
지역특화지역향토특별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관련종합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특화품목 생산기업 지역 향토산업 영위기업 및 특별지역 입주 중소기업	지역특화품목 및 향토산업관련 기술, 디자인, 소재개발 전시·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대출 조건과 유사 대출한도 : 시설자금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금리 : 4~5%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중기청에서 작성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에 근거해서 매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유형과 지원내용이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 표 2-5 >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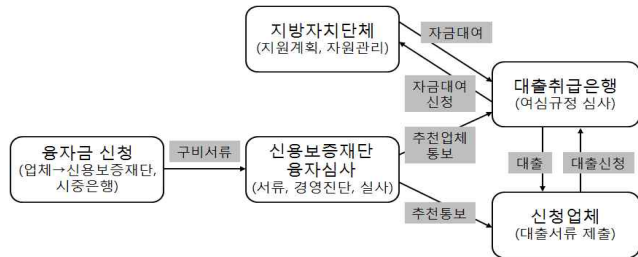
2) 추진방식 및 지원절차

(1) 추진방식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원형태나 방법에 따라 다르며,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방식에 의한 중소기업 지급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한 융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직접 융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정책수립, 기금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자금지원기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 >.

< 그림 2-1 > 지자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체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업체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접수를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융자결정 업체를 지자체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통보하게 된다. 시중은행은 별도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실행을 하게 되는 대리대출 지원방식이다. 이러한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12개 지방자치단체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및 제주도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의한 융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금융기관과 협조융자 방식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경우로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내용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는, 협조융자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융자조건은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융자취급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자치단체가 1.36% ~ 3.5%의 금리를 보전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조융자 방식을 택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지방자치단체이다 < 표-6 >.

< 표 2-6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2가지 지원방식

직접융자 방식	시중은행 협조은행 방식
지원자금 신청액에 대하여 지자체 지원금리로 자체 조성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	지원자금 신청액을 은행 자체자금으로 지원하고 은행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이차차이만을 조성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남,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2)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과 시행령 제51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하달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운용 세칙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만약,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지침과 상이하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용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자체에 자금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자체가 취급은행에 추천요청을 하게 된다.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하게 된다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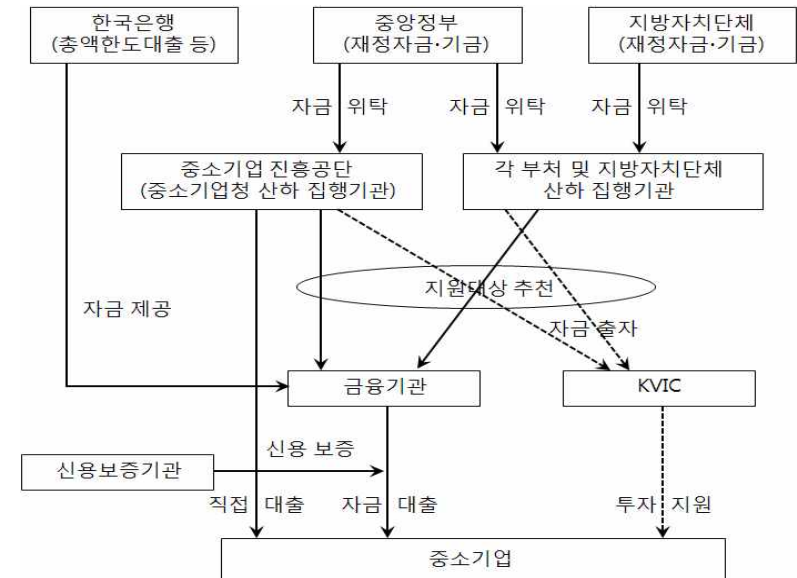
1)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기본체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대부분의 경영자원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금융은 대기업 금융, 가계금융 등과 다른 특성이 다르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은 인력, 정보력, 마케팅 능력 등이 취약하고 경영의 안정성이 높지 않아 신용 리스크가 높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확한 신용 파악이 곤란하고 건별 취급액이 작아 취급비용이 과다한 반면, 금리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워 수익성이 낮다. 다른 한편,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차입금리, 담보 등 차입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경기하강기에 중소기업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대출시장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보완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

하고 있다.

< 그림 2-2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1)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는 대출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보증을 통해 신용공여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선진국에서의 신용보증제도는 주로 대출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강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차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을 전담하는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설립(1976년) 등을 통해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3원화되어 있다.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이후 1989년에는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에는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보증을 제공해 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다.

신용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 이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과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삼아, 창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금융기관과 지역소재 대기업 출연금 등을 보증재원으로 삼아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2) 총액한도 대출제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금융기관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은행은 기존의 정책금융 대출제도를 대폭 축소·정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에게 저리의 자금의 차등 배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총액대출한도 및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제도이고 1994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총액대출한도를 각 은행별로 배정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배정하는 지역본부별 한도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각 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담보대출, 무역금융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체로 중소기업대출 취급실적이 높은 은행에 총액한도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7~8년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하자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하였다가 그 이후 신용경색이 완화됨에 따라 총액대출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하였다. 그러다가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하자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을 우려하여 다시 총액대출한도를 늘렸다.

2008년 현재 총액대출한도는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10조원 중 금융기관별 한도는 5조원이고 지역본부별 한도는 4.9조원이며 나머지는 긴급사태 발생 시 지원을 위한 배정보유분이다. 금융기관별 한도 중 2조원은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기관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0월 도입된 특별지원한도에 배정되어 있다. 총액대출한도의 한도 배정기준은 다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금 배정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는 주로 정책금리와 연계되어 조정되어 왔으나 정책금융으로 가능하기 위해 정책금리보다 낮게 설정되어 왔다. 1998년에는 시중금리와 총액한도대출 금리 간에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였으나, 2009년 8월 현재 시중금리와 총액한도대출 금리의 차이는 2~3% 포인트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정부의 정책자금 융·출자 지원

1980년대 들어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균형 성장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재정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은 정부부처,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공공기금 차입, 채권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구조조정, 기술개발 등 기능별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등이 있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은행을 경유하여 중소기업에 공급이 되나 일부는 공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지원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 활용업체의 78.2%가 “낮은 금리” 때문에 정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7.7%에 불과해 현행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주로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양호한 업체들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들은 재정을 활용하여 지원분야별로 다양한 융·출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10여개 부처가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산하기관의 심사·추천을 거쳐 위탁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행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적인 대출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출자지원은 해당 부처들이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기능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²⁾.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적용금리는 정책자금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시장금리보다 약간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는 4조원 내외로 추정되며, 중앙정부에 비해 지원금리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출자지원의 경우 정부의 벤처 출자지원사업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벤처캐피탈 시장의 선진화·고도화·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5년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출범시켰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이 모태펀드를 통해 출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위탁을 하여 대출하도록 하는 대리대출(혹은 간접대출)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 및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이 중소기업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 개입이 없는 민간 금융시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기본적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가 부족한 민간 금융기관은 대출금리의 인상이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금융기관이 신용할당을 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가격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되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높은 대출금리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인 것이다.

2)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공급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01년 약 145조원에서 2007년 약 370조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38.3%에서 2007년에는 46.2%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자금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2배 이상 증가한 2001~2006년 기간 동안, 『중소기업 금융이용에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난을 호소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다소 곤란” 응답 중소기업이 35.7%, “매우 곤란” 응답 중소기업이 5.2%에서 2006년에는 “다소 곤란” 35.8%, “매우 곤란” 8.1%로 오히려 자금난을 호소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증가해도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에는 담보대출 관행, 재무요인 평가에 치중한 은행의 대출심사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총 자금공급이 크게 확대되어도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은 여전하며, 특히 중소기업 내에서의 자금사정의 양극화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한 속에서도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 및 소기업 등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별적인 정책자금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경기 완충을 위한 정책자금의 지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 변동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경기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변동하고 있으며, 대략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 하락에 6개월 정도 앞서서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의 하락이 먼저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면, 은행은 한 발 앞서서 중소기업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변동의 이러한 모습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은행의 위험회피적인 중소기업대출 행태가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경기 순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는 시기에 대응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늘림으로써 경기 완충(buffer)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경기 순환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대응하여, 완충적 기능으로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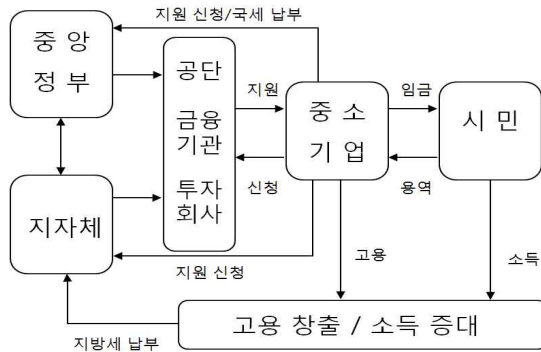
1)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 대출보증, 조세감면 등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개선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생산성과 시민소

득의 증대를 가져오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간 상호 교류의 증대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정주기반을 확대시킨다. 이로 인해 생산활동에 충당되는 자금과 사업결과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내에서 순환되고, 이것은 지역내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다시 지역내의 경제적 축적을 증대시키게 된다.

중소기업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다시 승수과정을 거쳐 지역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국세와 지방세의 증대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 그림 2-3 >과 같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적인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에 의해 창업, 사업확대 및 개선, 유치된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소득 및 고용창출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효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받은 기업을 매개로 발생하게 되며,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시점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된다.

< 그림 2-3 >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2) 기업경영 개선 효과

중소기업 지원자금, 특히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은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품질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매출, 수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성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생산과정의 자동화, 합리화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은 자동화나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보다는 생산 및 경영면에서의 개선효과는 낮지만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점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률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Jorengenson. 1963).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구매조건 생산자금 등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경영 및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품질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매출, 수출, 부가가치 증대 등 경영안정 및 고용 창출의 성과를 가져온다.

제3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자금운영 개요

대전광역시에서 지역중소기업의 효과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 자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 지원목적

우선, 경영안정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은 지역에 소재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한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지원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결국, 지역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지원개요

(1)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2008년 12월부터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고자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대책 후속조치로 자금지원은 지속 유지하되 이차보전금은 하향 지원하였다. 즉,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종전 3.5%~5.5%를 2.5%~4.5%로 1%p 하향 지원하였다.

지원규모는 은행협력자금으로 1,000억원으로 제조업체,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영상산업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5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반기업은 2억원 범위 안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참고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4억원 미만은 35% 적용하고 4억원 이상은 30%를 적용하고 있다. 타지역 전입기업이나 재난·재해기업, 중기업은 3억원 범위 안에서, 그리고 수출기업은 수출실적 연 10만불 이상 기업에 한해 5억원 범위 안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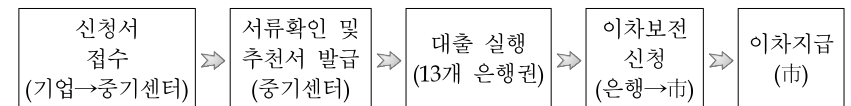
< 표 2-7 >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

수출실적	10만\$		50만\$		100만\$		500만\$		1,000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지원액	3억원		3.5억원		4억원		4.5억원		5억원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지원조건은 2년간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반기업은 2.5%, 우대기업은 3.5%~4.5%의 이자율을 지원하고 있다. 이차보전은 신청서 접수에서 이차지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자금지원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4 > 경영안정자금 지원 흐름도



지원유형별 이차보전 비율을 보면, 우선, 일반업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2.5% 이자율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우대지원은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연 3.5%를 지원하는 우대업체는 벤처등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출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3년 이내), 여성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다. 연 4.5%를 우대 지원하는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71 해당기업과 현행 3.5% 우대지원대상 기업 중 의료제조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은 공장부지 매입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제조업, 제조관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농협 협력자금 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협자금 지원업체 중 우대기업(벤처기업,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하여는 이차보전금으로 1.0%의 이자율을 우대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규모는 은행협력자금으로 총 5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제조업체,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영상산업 사업체이다. 지원조건은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매년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농협자금 6.04%이며, 용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이 중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원한도액은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총 13억원이며, 벤처등록기업,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기업(5년 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3년 이내), 여성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기업에 대하여는 1.0% 우대지원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2. 자금지원 현황

1)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우선, 경영안정자금은 2억~6억 한도 내에서 업체대출은 4.73%~14.4%, 이차보전은 2.5%~4.5%의 비율로 지원하였으며, 2007년 1,475억원(이차보전액 70.3억원)에서 2009년 3,313억원(이차보전액 105.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들어서는 1,999억원(이차보전액 134.4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차보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은 금융위기 유동성자금으로 약 3,313억원을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은 13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대출은 6.15%, 이차보전은 1.0%~2.0%의 비율로 지원하였으며, 2007년 498억원에서 2008년 634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차보전액은 소폭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2-8 > 자금지원 이율 및 실적

(단위 : 억원)

자금명	지원한도	이 율		지원실적(이차보전액)			
		업체대출	이차보전	2007	2008	2009	2010
경영안정자금	2억~6억	4.73% ~15.4%	2.5% ~4.5%	1,475 (70.3)	1,793 (70.9)	3,313 (105.2)	1,999 (143.4)
창업및경쟁력 강화사업자금	13억 (시설10, 운전3)	6.15%	1.0% ~2.0%	498 (2.9)	634 (6.5)	407 (8.7)	147 (9.0)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2) 지원자금 용자 추천 실적

(1) 경영안정자금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연도별 경영안정자금 용자 추천 실적을 보면, 2003년 729개 업체 1,027억원에서 2004년 612개 업체, 717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2009년까지 업체수 및 용자 추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2,011개 업체에 대하여 총 3,313억원에 달하였고, 2010년 들어서는 1,257개 업체에 대하여 2,000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8,556업체에 대하여 1조 2,490억원을 용자 추천하였고, 그 이전인 1994년부터 2002년까지 4,742개 업체, 5,576억원을 합하면, 1994년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총 13,928개 업체에 대하여 총 1조 8,066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용자 추천하였다.

< 표 2-9 > 연도별 경영안정자금 용자 추천 실적

(단위 : 개, 억원)

년도	계	'10	'09	'08	'07	'06	'05	'04	'03	'02~'94
업체수	13,298	1,257	2,011	1,214	1,066	959	708	612	729	4,742
금 액	18,066	2,000	3,313	1,793	1,475	1,300	865	717	1,027	5,576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용자 추천 현황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연도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용자 추천 실적을 보면, 2003년 65개 업체 449억원에서 2004년 60개 업체 388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70개 업체에 대하여 634억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9년부터 감소하여 2010년 현재

41개 업체에 대하여 151억원을 용자 추천하는데 그치고 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613개 업체에 대하여 3,257억원을 용자 추천하였고, 그 이전인 1994년부터 2002년까지 778개 업체, 2,753억원을 합하면, 1994년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총 1,391개 업체에 대하여 총 6,010억원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을 용자 추천하였다.

< 표 2-10 > 연도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용자 추천 실적

(단위 : 개, 억원)

년도	계	'10	'09	'08	'07	'06	'05	'04	'03	'02~'94
업체수	1,391	41	82	170	91	26	78	60	65	778
금 액	6,010	151	407	634	498	184	546	388	449	2,753

주 : 2006년 10월부터 하나은행 자금으로 지원하였으나, 2008년 4월부터 농협자금으로 지원.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3) 이차보전금 지급현황

(1)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

대전광역시는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을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3년 52억 3,200만원에서 2004년과 2005년 약간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6년 66억 9,300만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43억 4,4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음으로 창업자금은 2006년 7백만원의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였으나, 2007년 2억 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억 100만원에 달하였다.

결국,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실적을 보면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경영안정자금 606억 4,100만원, 창업자금 27억 2,100만원, 총 633억

6,2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였다.

< 표 2-11 > 연도별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계	63,362	5,242	4,819	4,884	6,700	7,323	7,749	11,400	15,245
경영안정자금	60,641	5,242	4,819	4,884	6,693	7,032	7,099	10,528	14,344
창업자금	2,721	-	-	-	7	291	650	872	901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대전광역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에 대하여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먼저, 기금으로 이차보전한 실적을 보면, 2003년 12억 9,200만원에서 2006년 18억 2,9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현재 5억 2,100만원까지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은행자금으로 이차보전한 실적을 보면, 2006년 7백만원의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였으나, 2007년 2억 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9억 100만원에 달하였다. 은행자금으로 이차보전한 자금은 모두 창업자금에 해당된다.

< 표 2-12 > 연도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계	12,965	1,292	1,419	1,496	1,836	1,914	1,850	1,736	1,422
기 금	10,244	1,292	1,419	1,496	1,829	1,623	1,200	864	521
은행자금	2,721	-	-	-	7	291	650	872	901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결국,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으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실적을 보면 2003년 이후 2010년까지 기금 102억 4,400만원, 은행자금 27억 2,100만원, 총 129억 6,5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였다.

4) 201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2010년도 대전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한 현황을 보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1,257개 업체에 대하여 1,999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으로는 41개 업체에 대하여 150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298개업체에 대하여 2,150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금으로 10,446개 업체 1,483억원을, 기술보증기금 기술 평가에 의한 경영안정자금으로 47개 업체 138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 표 2-13 >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 계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
지원 계획		250,000	200,000	50,000
지 원 상 황	업 체 수	1,298	1,257	41
	지원금액	215,037	199,987	15,050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1) 경영안정자금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의 업종별 지원현황을 보면, 제조업체가 894개 업체에 대하여 1,344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건설업 135개 업체 250억 9,700만원,

제조관련 서비스업 103개 업체 217억 2,300만원, 서비스업 97개 업체 139억 1,400만원, 운수업 28개 업체 37억 6,300만원 순이며, 총 1,257개 업체에 대하여 1,999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다.

업체당 평균으로는 모든 업체 평균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서 제조관련 서비스업이 2억 1,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건설업 1억 8,600만원, 서비스업 1억 5,400만원, 제조업 1억 5,000만원, 운수업 1억 3,400만원 순으로 지원하였다.

< 표 2-14 >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업종별 현황					
	합 계	제조업	건설업	제조관련 서비스	운수업	서비스업
업 체 수	1,257	894	135	103	28	97
금 액	199,987	134,490	25,097	21,723	3,763	14,914
업체평균	159	150	186	211	134	154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2.5%의 이자율을 지원하는 일반기업은 총 835개 업체에 대하여 1,182억 1,7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기업의 절반을 초과하는 66.4%였으며, 3.5%의 이자율로 우대하는 우대기업은 398개 업체에 대하여 787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기업의 36.7%를 차지하였고, 4.5%의 최고 이자율로 우대하는 의료기업은 24개 업체에 대하여 29억 8,3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기업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3.5%의 이자율로 우대 지원하는 기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벤처인증기업이 124개 업체에 대하여 가장 많은 259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기업도 148개 업체에 대하여 19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다. 기타 수출기업, 타시도로부터 전입한 기업, 이노비즈기업 순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5 >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합 계	일 반 기업 (2.5%)	우대기업(3.5%)						의 료 기업 (4.5%)
			소 계	여 성 기업	벤 처 기업	수 출 기업	이 노 비즈 기업	전 입 기업 등	
업체수	1,257	835	398	148	124	47	29	50	24
지원액	199,987	118,217	78,787	19,549	25,944	17,076	7,635	8,583	2,983
지원비율	100.0	66.4	36.7	11.8	9.9	3.7	2.3	4.0	1.9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의 용자 추천금액별 지원현황을 보면, 1억 이상 2억원 미만이 가장 많은 381개 업체에 대하여 664억 9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기업의 30.3%를 차지하였으며, 5천만원 미만을 지원한 기업도 348개 업체로 전체의 27.7%를 차지하였고, 2억 이상 3억 미만을 지원한 기업은 262개 업체로 20.8%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금액 6억을 지원한 기업은 12개 업체로 전체 기업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16 > 2010년도 경영안정자금 용자 추천금액별 지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계	5천만원 미만	5천이상~1억미만	1억이상~2억미만	2억이상~3억미만	3억이상~5억미만	5억이상~6억미만	6억
업체수	1,257	348	218	381	262	17	19	12
지원액	199,987	15,898	19,145	66,409	75,764	6,471	9,150	7,150
용자비율	100	27.7	17.3	30.3	20.8	1.4	1.5	1.0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의 지원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41개 업체에 대하여 15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에서 일반기업은 4개 업체 6억 4,000만원, 1%의 이자율을 우대 지원하는 기업은 총 37개 업체 144억 1,000만원이었다. 우대기업 중에서는 테크노밸리 입주업체가 가장 많은 22개 업체로 총 6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기타 벤처등록기업, 타 시·도 전입기업, 여성기업은 각각 5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 표 2-17 > 2010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기업	우대기업(1.0%)				
			소 계	벤처 기업	테크노밸리입주	전 입 기업	여 성 기업
업체수	41	4	37	5	22	5	5
금 액	15,050	640	14,410	3,448	6,663	3,610	689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3. 자금지원상의 문제점과 검토내용

1) 자금지원상의 문제점

(1) 은행협력자금의 경우 협약금리 적용 불가

경영안정자금은 은행협력 자금으로 기업체(CEO)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이자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

체별 4.73%에서 8% 수준이고 최고 14.4%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물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의 경우 협약금리로 6.15%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업체(CEO)에 따라 상이한 이자율로 인하여 공통의 협약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2) 유동성 특별대책에 따른 이차보전액 추가 부담 발생

2008년말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유동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기인하여 2년간(2010년~2011년)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액 추가 부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이차보전액은 2008년 말의 유동성 특별대책으로 2009년은 2008년 대비 36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이고, 2010년은 2009년 대비 39억원이 증가한 153억원이며, 2011년은 2010년 대비 3억 감소한 150억원, 2012년은 2011년 대비 30억원이 감소한 12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	(’08대비	2010년	(’09대비	2011년	(’10대비	2012년
이차보전액	114억	36억 증)	153억	39억 증)	150억	3억 감)	120억

이에 따라 2009년~2010년 11월 융자액 이차보전액 96억원에 2010년 11월과 12월 자금융자 이차보전액 4억, 그리고 2011년 자금 융자 이차보전액 예상액 50억원을 모두 합하여 2011년에 이차보전액 150억원의 추가 부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자금대출 지속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에 의한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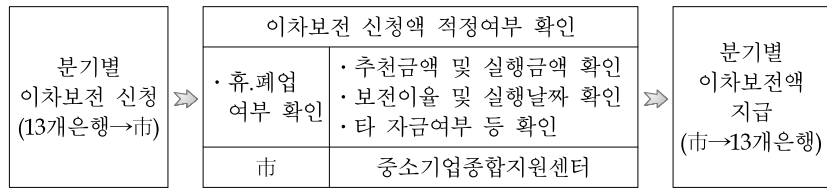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지속 지원이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의 경쟁논리에

의한 자구적인 경영혁신 노력보다는 정부의 의존하려는 타성과 도덕적 해이가 예상되어 오히려 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자금대출 실행횟수 및 이자율이 3회까지 2.5%~3.5% 지원, 4회부터 1.5%로 장기화 되면서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지원자금을 2년간 용자실행 후 상환한 다음 채용자를 실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동성 특별대책시 횡수제한 중지로 기용자업체도 도중 해약하고 유리한 신규 용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며, 특정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부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된다.

(4) 은행별 대출실행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위한 “자금관리시스템” 미비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심사하여 용자 추천을 하게 되고 은행으로부터 용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협력은행간 연계된 시스템 미비로 은행별 대출실행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분기별 이차보전액 청구시에 비로소 대출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대전광역시 검토내용

(1) 타 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내용 비교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 특·광역시 모두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 특·광역시 모두 공통으로 은행협력자금의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용자규모는 2010년의 경우 서울이 1조 3,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이 5,000억 원 대구가 3,000억원, 대전이 2,000억원 순으로 많고, 용자한도는 인천이 4억~10억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 3~6억원, 서울이 5억원, 대구가 3~5억원 순으로, 최소 2억원(울산)에서 최대 10억원(인천)에 이른다. 따라서 대전은 상대적으로 용자금액이 많고 용자한도가 큰 편에 속한다.

< 표 2-18 > 특·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내역

구분	자금별	용자규모(억원)		용자한도	금리(%) (이차보전)	용자기간
		'09년	'10년			
대전	경영안정자금(협약)	3,313	2,000	3~6억	은행금리 (2.5~4.5)	2년
서울	시중은행협력자금	14,272	13,100	5억	CD변동금리 (0.5~1.5)	4~5년
부산	중소기업운전자금(협약)	1,966	1,700	2억	은행금리 (2~5)	3년
대구	경영안정자금(협약)	3,781	3,000	3~5억	은행금리 (2~3)	1년
인천	경영안정자금(협약)	6,339	5,000	4~10억	은행금리 (2.5~4)	2~4년
광주	경영안정자금(협약)	1,816	1,300	3억	은행금리 (2.5~3)	2년
울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955	700	2억	8.72변동 (2~4)	2년

자료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금리는 대부분 은행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이차보전 금리는 최소 2%(부산, 울산)에서 최대 5%(부산) 수준이며, 대전은 2.5%~4.5% 수준이다. 융자기간은 최소 1년(대구)에서 최대 5년(서울)이며, 대전은 2년으로, 대전이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타 광역시 대비 평균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 은행별자율금리 적용 및 업력에 따른 지원

은행협력자금은 대부분 기업체의 신용도와 거래은행별 금리가 상이하어, 일정수준의 금리 이상만 적용할 경우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하의 업력을 가진 기업만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08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9.5%가 높은 대출금리를 애로사항으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금리가 업체별 4.73%에서 8.0%수준이고 최고 14.4%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3) 자금대출 횟수 제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경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회까지 2.5% 이차보전해 주고, 4회부터 최장 6년까지는 1.4%를 이차보전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 지원에 의지하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부산은 3회로 제한하고 있고 대구는 상환 후 2년 경과 후 지원하고 있다.

(4) 구매조건 생산자금 지원 및 재난기업 특별지원 검토

구매조건 생산자금은 중소기업 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 및 경쟁력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전년도 매출실적)이 구비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 또는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에 근거한 생산활동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계속 지원할지 여부도 지원효과를 평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또는 수해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특별지원할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자금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제 3 장

자금지원의 정책효과 분석

제1절 자금지원의 만족도 분석

제2절 자금지원의 효과 분석

제1절 자금지원의 만족도 분석

1. 자금지원 시책 및 규모에 대한 만족도

1) 자금지원 시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전체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1.0%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추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표 3-1 > 중소기업 자금지원시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개, %)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제조업	빈도수	8	17	68	115	113	321
	구성비	2.5	5.3	21.2	35.8	35.2	100.0
제조관련업	빈도수	2	2	12	22	9	47
	구성비	4.3	4.3	25.5	46.8	19.1	100.0
건설업	빈도수	4	9	16	33	27	89
	구성비	4.5	10.1	18.0	37.1	30.3	100.0
운수업	빈도수	0	0	1	8	11	20
	구성비	0.0	0.0	5.0	40.0	55.0	100
서비스업	빈도수	3	0	12	26	14	55
	구성비	5.5	0.0	21.8	47.3	25.5	100.0
합계	빈도수	17	28	109	204	174	532
	구성비	3.2	5.3	20.5	38.3	32.7	100.0

업종별로는 운수업종의 전반적 만족도가 95.0%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종의 만족도가 72.8%, 제조업종이 71.0%로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는 평균만족도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건설업종과 제조관련업종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전반적 만족도가 각각 67.4%, 65.9%를 보여,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2) 자금지원 규모의 충분성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 크기의 충분성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전체로는 자금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32.0%이고, 충분하다는 응답이 26.5%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표 3-2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규모의 충분성

(단위 : 개, %)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제조업	빈도수	18	96	120	45	42	321
	구성비	5.6	29.9	37.4	14.0	13.1	100.0
제조관련업	빈도수	2	12	24	8	1	47
	구성비	4.3	25.5	51.1	17.0	2.1	100.0
건설업	빈도수	4	21	43	13	8	89
	구성비	4.5	23.6	48.3	14.6	9.0	100.0
운수업	빈도수	0	6	6	4	4	20
	구성비	0.0	30.0	30.0	20.0	20.0	100.0
서비스업	빈도수	2	9	28	12	4	55
	구성비	3.6	16.4	50.9	21.8	7.3	100.0
전체	빈도수	26	144	221	82	59	532
	구성비	4.9	27.1	41.5	15.4	11.1	100.0

업종별로는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종은 자금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 향후 이들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는 반대로 운수업종과 서비스업종은 자금지원규모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나, 이들 업종에 대하여는 향후 자금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지원자금 총액이 제한적일 경우, 앞으로는 운수업종과 서비스업종의 지원 규모를 축소시키고, 축소로 인한 여부자금은 제조업종, 제조관련업종, 건설업종 등에 지원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자금지원 효과의 크기 만족도 및 용자목적 사용 부합도

1) 자금지원 효과의 크기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전체로는 지원효과가 크다는 응답이 전체의 76.9%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업종별 자금지원 효과의 크기를 보면, 운수업종은 지원효과가 크다는 응답이 90.0%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제조업종은 79.2%, 제조관련업종은 78.8%로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는 평균응답률 이상의 응답을 보여 상대적으로 지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종과 서비스업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지원효과가 크다는 응답이 각각 74.5%, 66.3%를 보여, 이들 업종도 지원효과가 만족하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표 3-3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효과의 크기

(단위 : 개, %)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제조업	빈도수	8	11	48	119	135	321
	구성비	2.5	3.4	15.0	37.1	42.1	100.0
제조관련업	빈도수	1	2	7	20	17	47
	구성비	2.1	4.3	14.9	42.6	36.2	100.0
건설업	빈도수	2	7	21	28	31	89
	구성비	2.2	7.9	23.6	31.5	34.8	100.0
운수업	빈도수	0	0	2	4	14	20
	구성비	0.0	0.0	10.0	20.0	70.0	100.0
서비스업	빈도수	3	0	11	22	19	55
	구성비	5.5	0.0	20.0	40.0	34.5	100.0
전체	빈도수	14	20	89	193	216	532
	구성비	2.6	3.8	16.7	36.3	40.6	100.0

2) 지원금의 용자목적 사용 부합도

대전광역시가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용자금을 원래 용자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전체로는 용자받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81.1%로 나타나, 기업들 대부분은 용자받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중에서 지원금을 용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87.2%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81.9%, 제조관련업이 80.9%로 응답하여 이들 업종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금을 용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운수업과 건설업은 지원금을 용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8.9%, 75.3%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들 업종도 대부분 지원금을 용자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용자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는지의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 기준을 두고 판단할 것인가는 정책당국(대전광역시)의 몫일 것이지만, 대체로 80% 수준에 기준을 둔다면, 운수업과 건설업종의 용자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원자금을 좀 더 용자 목적에 사용토록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4 > 용자받은 자금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정도

(단위 : 개, %)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 계	
제조업	빈도수	11	16	31	138	124	320
	구성비	3.4	5.0	9.7	43.1	38.8	100.0
제조관련업	빈도수	0	0	9	21	17	47
	구성비	0.0	0.0	19.1	44.7	36.2	100.0
건설업	빈도수	3	6	13	43	24	89
	구성비	3.4	6.7	14.6	48.3	27.0	100.0
운수업	빈도수	2	1	1	7	8	19
	구성비	10.5	5.3	5.3	36.8	42.1	100.0
서비스업	빈도수	2	0	5	30	18	55
	구성비	3.6	0.0	9.1	54.5	32.7	100.0
전체	빈도수	18	23	59	239	191	530
	구성비	3.4	4.3	11.1	45.1	36.0	100.0

제2절 자금지원의 효과 분석

1. 자금지원의 정성적 효과 분석

1) 자금지원이 생산에 미친 효과

(1) 업종별

대전지역 중소기업체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용자받은 지원자금을 운용한 결과 생산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분석해 보자.

< 표 3-5 > 지원자금 용자가 생산에 미친 영향(업종별)

(단위 : 개, %)

구 분		전혀 없다	대체로 작다	보통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합계
전체	빈도수	11	15	142	254	90	512
	구성비	2.1	2.9	27.7	49.6	17.6	100.0
제조업	빈도수	3	9	70	169	67	318
	구성비	0.9	2.8	22.0	53.1	21.1	100.0
제조관련업	빈도수	1	0	17	20	7	45
	구성비	2.2	0.0	37.8	44.4	15.6	100.0
건설업	빈도수	2	4	35	32	8	81
	구성비	2.5	4.9	43.2	39.5	9.9	100.0
운수업	빈도수	1	0	3	9	5	18
	구성비	5.6	0.0	16.7	50.0	27.8	100.0
서비스업	빈도수	4	2	17	24	3	50
	구성비	8.0	4.0	34.0	48.0	6.0	100.0

우선, 용자받은 조사대상 업종 전체로는 '대체로 크다'가 49.6%, '매우 크다'가 17.6%로 응답하여 전체의 67.2%가 지원자금이 생산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대체로 지원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업종별로는 운수업종에서 77.8%, 제조업종에서 74.2%로 각각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여 이들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관련업종과 서비스업종에서는 각각 60.0%, 54.0%가 지원자금이 생산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여 이들 업종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지만, 모두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한 결과를 볼 때는, 지원효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업 규모별

지원자금 용자가 생산에 미친 영향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1~9인 업체, 10~49인 업체, 50인 이상 업체 모두 지원자금이 생산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였으나, 2010년은 67.1%로 응답하여 근소하게 감소하였지만, 효과가 전혀 없거나 대체로 작다고 응답한 경우보다는 매우 커서, 전반적으로는 지원자금이 생산에 미친 효과가 크지만, 연도가 지속되면서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근소하게나마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1~5인 업체의 경우 지원자금이 생산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업체가 2007년 67.4%에서 2010년 70.4%로 높아졌지만, 10~49인 업체는 2007년 69.2%에서 2010년 64.4%로, 50인 이상 업체는 2007년 68.0%에서 2010년 65.7%로 각각 낮아져, 지원자금이 생산에 미친 연도별 효과는 1~5인 업체의 경우 커지고 있지만, 10~49인 업체와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는 작아지고 있다.

한편, 기업 규모별 생산에 미친 효과는 1~9인 업체에 대한 지원효과가 10~49인 및 50인 이상 업체에 대한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표 3-6 > 지원자금 용자가 생산에 미친 영향(기업 규모별)

(단위 : 개, %)

년도	규모	전혀 없다		대체로 작다		보통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2007	1~9인	2	1.4	3	2.1	42	29.2	76	52.8	21	14.6	144	100.0
	10~49인	3	2.5	4	3.3	30	25.0	68	56.7	15	12.5	120	100.0
	50인 이상	1	4.0	0	0.0	7	28.0	11	44.0	6	24.0	25	100.0
	전체	6	2.1	7	2.4	79	27.3	155	53.6	42	14.5	289	100.0
2008	1~9인	2	1.0	6	2.9	53	25.4	110	52.6	38	18.2	209	100.0
	10~49인	5	3.2	7	4.5	46	29.5	79	50.6	19	12.2	156	100.0
	50인 이상	1	3.8	0	0.0	8	30.8	11	42.3	6	23.1	26	100.0
	전체	8	2.0	13	3.3	107	27.4	200	51.2	63	16.1	391	100.0
2009	1~9인	2	0.9	7	3.0	57	24.5	120	51.5	47	20.2	233	100.0
	10~49인	7	3.2	7	3.2	63	28.9	109	50.0	32	14.7	218	100.0
	50인 이상	2	5.7	0	0.0	12	34.3	14	40.0	7	20.0	35	100.0
	전체	11	2.3	14	2.9	132	27.2	243	50.0	86	17.7	486	100.0
2010	1~9인	1	0.5	7	3.3	54	25.8	104	49.8	43	20.6	209	100.0
	10~49인	8	3.4	8	3.4	68	28.8	118	50.0	34	14.4	236	100.0
	50인 이상	1	2.9	0	0.0	11	31.4	16	45.7	7	20.0	35	100.0
	전체	10	2.1	15	3.1	133	27.7	238	49.6	84	17.5	480	100.0

2) 자금지원이 매출에 미친 효과

(1) 업종별

중소기업체가 용자받은 지원자금을 운용한 결과 매출에 미친 영향은,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 전체로는 '대체로 크다'가 48.4%, '매우 크다'가 18.9%로 응답하여 전체의 67.3%가 매출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에서 85.0%가 지원자금이 매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지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은 70.9%, 제조업은 69.1%가 지원자금이 매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이들 업종에서 지원자금의 매출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관련업은 63.8%, 건설업은 56.3%가 지원자금이 매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응답하여, 이들 업종에서 지원자금의 매출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7 > 지원자금 용자가 매출에 미친 영향(업종별)

(단위 : 개, %)

구분		전혀 없다	대체로 작다	보통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합계
전체	빈도수	2	13	158	256	100	529
	구성비	0.4	2.5	29.9	48.4	18.9	100.0
제조업	빈도수	1	9	89	156	65	320
	구성비	0.3	2.8	27.8	48.8	20.3	100.0
제조관련업	빈도수	0	0	17	23	7	47
	구성비	0.0	0.0	36.2	48.9	14.9	100.0
건설업	빈도수	1	3	34	38	11	87
	구성비	1.1	3.4	39.1	43.7	12.6	100.0
운수업	빈도수	0	0	3	8	9	20
	구성비	0.0	0.0	15.0	40.0	45.0	100.0
서비스업	빈도수	0	1	15	31	8	55
	구성비	0.0	1.8	27.3	56.4	14.5	100.0

(2) 기업 규모별

지원자금 용자가 매출에 미친 영향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1~9인 업체, 10~49인 업체, 50인 이상 업체 모두 지원자금이 매출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65.8%에서 2010년은

67.8%로 응답하여, 효과가 전혀 없거나 대체로 작다고 응답한 경우보다는 매우 커서, 전반적으로는 지원자금이 매출에 미친 효과가 연도가 지속되면서 근소하게나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의 생산에 미친 효과가 작아지는 것과 대조된다.

규모별로는 1~5인 업체의 경우 지원자금이 매출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업체가 2007년 68.8%에서 2010년 71.8%로, 10~49인 업체도 2007년 63.8%에서 2010년 65.3%로, 50인 이상 업체도 2007년 59.2%에서 2010년 61.5%로 각각 높아져 전 규모에 걸쳐 지원자금이 매출에 미친 연도별 효과는 모두 커지고 있다.

< 표 3-8 > 지원자금 용자가 매출에 미친 영향(기업 규모별)

(단위 : 개, %)

년도	규모	전혀 없다		대체로 작다		보통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2007	1~9인	0	0.0	2	1.4	43	29.9	77	53.5	22	15.3	144	100.0
	10~49인	1	0.8	2	1.6	43	33.9	65	51.2	16	12.6	127	100.0
	50인 이상	1	3.7	0	0.0	10	37.0	10	37.0	6	22.2	27	100.0
	전체	2	0.7	4	1.3	96	32.2	152	51.0	44	14.8	298	100.0
2008	1~9인	0	0.0	5	2.4	52	24.8	113	53.8	40	19.0	210	100.0
	10~49인	1	0.6	4	2.5	57	35.0	78	47.9	23	14.1	163	100.0
	50인 이상	1	3.7	0	0.0	10	37.0	10	37.0	6	22.2	27	100.0
	전체	2	0.5	9	2.3	119	29.8	201	50.3	69	17.3	400	100.0
2009	1~9인	0	0.0	6	2.5	58	24.4	123	51.7	51	21.4	238	100.0
	10~49인	1	0.4	5	2.2	73	32.2	110	48.5	38	16.7	227	100.0
	50인 이상	1	2.7	0	0.0	16	43.2	13	35.1	7	18.9	37	100.0
	전체	2	0.4	11	2.2	147	29.3	246	49.0	96	19.1	502	100.0
2010	1~9인	0	0.0	6	2.8	54	25.4	107	50.2	46	21.6	213	100.0
	10~49인	2	0.8	7	2.9	76	31.0	119	48.6	41	16.7	245	100.0
	50인 이상	0	0.0	0	0.0	15	38.5	17	43.6	7	17.9	39	100.0
	전체	2	0.4	13	2.6	145	29.2	243	48.9	94	18.9	497	100.0

한편, 기업 규모별 매출에 미친 영향은 1~9인 업체에 대한 지원효과가 가장 크고, 이어서 10~49인 업체, 50인 이상 업체 순으로 지원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자금지원이 고용에 미친 효과

(1) 업종별

중소기업체가 용자받은 지원자금을 운용한 결과 고용에 미친 영향은,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 전체로는 '대체로 크다'가 33.2%, '매우 크다'가 12.7%로 응답하여 전체의 45.9%가 고용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고용에 미친 효과가 전혀 없거나 대체로 작다고 응답한 기업이 11.4%에 불과하여,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앞에서 지원자금이 생산과 매출에 미친 영향과 비교할 때는 낮은 효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8.1%, 운수업이 47.3%, 제조관련업이 46.7%가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여 이들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각각 45.9%, 45.4%가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응답하여 이들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전혀 없거나 대체로 작다고 응답한 기업은 업종별로 최소 5.3%(운수업)에서 최대 12.8%(제조업)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표 3-9 > 지원자금 용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업종별)

(단위 : 개, %)

구 분		전혀 없다	대체로 작다	보통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합계
		빈도수	25	34	221	172	66
전체	구성비	4.8	6.6	42.7	33.2	12.7	100.0
	빈도수	15	25	133	99	45	317
제조업	구성비	4.7	7.9	42.0	31.2	14.2	100.0
	빈도수	3	2	19	18	3	45
제조관련업	구성비	6.7	4.4	42.2	40.0	6.7	100.0
	빈도수	3	5	38	31	8	85
건설업	구성비	3.5	5.9	44.7	36.5	9.4	100.0
	빈도수	1	0	9	7	2	19
운수업	구성비	5.3	0.0	47.4	36.8	10.5	100.0
	빈도수	3	2	22	17	8	52
서비스업	구성비	5.8	3.8	42.3	32.7	15.4	100.0

(2) 기업 규모별

지원자금 용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1~9인 업체, 10~49인 업체, 50인 이상 업체 모두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에서 2010년은 46.6%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지만, 2007년 보다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효과는 근소하게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대체로 작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생산과 매출에 미친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연도가 지속되면서 효과가 작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규모별로는 1~5인 업체의 경우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응답한 업체가 2007년 52.9%에서 2010년 45.3%로, 10~49인 업체도 2007년 46.0%에서 2010

년 45.7%로, 50인 이상 업체도 2007년 62.9%에서 2010년 59.0%로 각각 낮아져 전 규모에 걸쳐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연도별 효과는 모두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기업 규모별 고용에 미친 효과는 50인 이상 업체에 대한 지원효과가 가장 크고, 이어서 1~9인 업체, 10~49인 업체는 지원효과가 유사한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 표 3-10 > 지원자금 용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기업 규모별)

(단위 : 개, %)

년도	구 모	전혀 없다		대체로 작다		보통		대체로 크다		매우 크다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2007	1~9인	4	2.9	12	8.7	49	35.5	58	42.0	15	10.9
	10~49인	5	4.0	6	4.8	57	45.2	42	33.3	16	12.7	126	100.0
	50인 이상	1	3.7	0	0.0	9	33.3	11	40.7	6	22.2	27	100.0
	전체	10	3.4	18	6.2	115	39.5	111	38.1	37	12.7	291	100.0
2008	1~9인	9	4.5	16	7.9	82	40.6	68	33.7	27	13.4	202	100.0
	10~49인	7	4.3	10	6.2	73	45.1	56	34.6	16	9.9	162	100.0
	50인 이상	1	3.7	0	0.0	11	40.7	9	33.3	6	22.2	27	100.0
	전체	17	4.3	26	6.6	166	42.5	133	34.0	49	12.5	391	100.0
2009	1~9인	14	6.1	18	7.9	92	40.2	75	32.8	30	13.1	229	100.0
	10~49인	9	4.0	14	6.2	98	43.6	77	34.2	27	12.0	225	100.0
	50인 이상	2	5.4	0	0.0	15	40.5	14	37.8	6	16.2	37	100.0
	전체	25	5.1	32	6.5	205	41.8	166	33.8	63	12.8	491	100.0
2010	1~9인	11	5.4	17	8.3	84	41.0	64	31.2	29	14.1	205	100.0
	10~49인	11	4.5	16	6.6	105	43.2	83	34.2	28	11.5	243	100.0
	50인 이상	2	5.1	0	0.0	14	35.9	17	43.6	6	15.4	39	100.0
	전체	24	4.9	33	6.8	203	41.7	164	33.7	63	12.9	487	100.0

2. 자금지원의 정량적 효과 분석

1) 자금지원이 생산에 미친 효과

(1) 업종별

지원자금의 좀 더 정확한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자. 우선,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과 용자받고 자금을 운용한 1년 후의 생산액 증감효과를 평가해 보자.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후로 업종별 생산액 증감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조사대상 업종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액은 1,045억원, 1기업당 평균 생산액은 4억 7,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용자를 받아 운영한 결과 생산에 미친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 표 3-11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생산액 증감(업종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용자지원 전 1년 평균(A)	생산총액	467,635	396,795	42,322	18,692	510	9,316
	1기업당	2,135	2,362	2,116	1,100	102	1,035
용자지원 후 1년 평균(B)	생산총액	572,127	489,831	44,810	22,428	1,020	14,038
	1기업당	2,612	2,916	2,241	1,319	204	1,560
증감(B-A)	생산총액	104,493	93,037	2,488	3,736	510	4,722
	1기업당	477	554	124	220	102	525
증감률		22.3	23.4	5.9	20.0	100.0	50.7

이들 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1기업당 높은 생산액 증가를 보인 업종은 제조업 5억 5,400만원, 서비스업 5억 2,500만원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를 보인 업종은 운수업 1억 200만원, 제조관련업 1억 2,400만원, 건설업 2억 2,000만원으로 나타나

고 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운수업 100.0%, 서비스업 50.7%, 제조업 23.4%, 건설업 20.0% 순이며, 낮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제조관련업 5.9%로 나타나고 있다³⁾.

(2) 기업 규모별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후로 기업규모별 생산액 증감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조사대상 규모 전체적으로는 1기업당 생산액 증가율이 2007년 24.5%, 2008년 19.8%, 2009년 21.2%, 2010년 21.2%로 2007년 이후 2008년 매우 낮아졌고, 2009년과 2010년은 2008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2007년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 1기업 평균 생산액 증가율은 1~9인 업체는 2007년 36.8%에서 2010년 15.4%로, 10~49인 업체는 2007년 31.5%에서 2010년 22.5%로 각각 매우 낮아졌지만, 50인 이상 업체는 2007년 11.6%에서 2010년 20.5%로 크게 높아져 큰 규모의 업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1기업당 평균 생산액 증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 규모별 생산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2007년을 제외하고는 10~49인 업체의 1기업당 평균 생산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9인 업체, 50인 이상 업체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조사대상 업체수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생산총액은 비교하지 않는다.

< 표 3-12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생산액 증감(기업 규모별)

(단위 : 백만원, %)

년도	구 모	자금지원 전 1년		자금지원 후 1년		전후 증감		증감률	
		생산총액	1기업 평균	생산총액	1기업 평균	생산총액	1기업 평균	생산 총액	1기업 평균
2007	1~9인	44,165	775	61,494	1,060	17,329	285	39.2	36.8
	10~49인	115,618	2,102	154,821	2,765	39,204	663	33.9	31.5
	50인 이상	95,159	6,797	106,176	7,584	11,017	787	11.6	11.6
	전체	254,942	2,023	322,491	2,519	67,550	496	26.5	24.5
2008	1~9인	176,361	2,075	207,859	2,445	31,498	371	17.9	17.9
	10~49인	127,764	1,966	173,068	2,545	45,305	580	35.5	29.5
	50인 이상	98,122	7,548	109,998	8,461	11,876	914	12.1	12.1
	전체	402,247	2,468	490,925	2,957	88,679	490	22.0	19.8
2009	1~9인	82,177	775	100,323	938	18,146	162	22.1	20.9
	10~49인	293,879	3,061	369,759	3,812	75,881	751	25.8	24.5
	50인 이상	99,922	6,661	112,148	7,477	12,226	815	12.2	12.2
	전체	475,978	2,193	582,230	2,659	106,253	465	22.3	21.2
2010	1~9인	75,162	800	86,732	923	11,570	123	15.4	15.4
	10~49인	289,421	2,810	361,333	3,441	71,913	631	24.8	22.5
	50인 이상	110,130	6,478	132,665	7,804	22,535	1,326	20.5	20.5
	전체	474,713	2,218	580,730	2,689	106,018	470	22.3	21.2

2) 자금지원이 매출에 미친 효과

(1) 업종별

① 지원자금 용자 1년 전과 후의 매출액 증감효과

지원자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친 정성적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지원자금을 용

자받기 1년 전과 용자받고 자금을 운용한 1년 후의 매출액 증감효과를 평가해 보자.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후로 매출액 증감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조사대상 업종 전체적으로는 총매출액은 2,417억원, 1기업당 평균 생산액은 5억 5,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2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생산액 증가율 22.3%와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용자를 받아 운영한 결과 매출에 미친 효과도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들 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1기업당 높은 매출액 증가를 보인 업종은 제조관련업 7억 6,000만원, 건설업 7억 4,700만원, 서비스업 5억 7,700만원 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를 보인 업종은 제조업 4억 9,400만원, 운수업 2억 3,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서비스업 42.4%, 건설업 33.0% 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제조관련업 22.0%, 운수업 20.1% 제조업 1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13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매출액 증감(업종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용자지원 전 1년 (A)	매출총액	1,039,275	673,773	134,669	154,026	21,100	55,707
	1기업당	2,384	2,495	3,453	2,265	1,172	1,359
용자지원 후 1년 (B)	매출총액	1,280,997	807,183	164,307	204,804	25,350	79,354
	1기업당	2,938	2,990	4,213	3,012	1,408	1,935
증감(B-A)	매출총액	241,722	133,410	29,638	50,778	4,250	23,646
	1기업당	554	494	760	747	236	577
증감률		23.3	19.8	22.0	33.0	20.1	42.4

②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증감효과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조사대상 업체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증감효과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업종 전체로는 1기업 평균 매출액이 2007년 23억, 2,400만원 2008년 25억 5,400만원, 2009년 29억 1,000만원, 2010년 32억 8,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1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액은 2008년 2억 2,900만원, 2009년 3억 5,700만원, 2010년 3억 7,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1기업 평균 매출액이 제조업과 제조관련업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운수업과 건설업은 2008년, 서비스업은 2008년과 2010년에는 감소한 바 있다.

1기업당 평균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관련업이며, 이어서 제조업, 건설업과 서비스업 순이다.

< 표 3-14 > 조사대상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체
2007	총매출액	390,169	40,766	157,484	6,423	60,654	655,496
	1기업평균	2,282	1,772	3,424	1,071	1,685	2,324
2008	총매출액	667,727	75,880	186,602	13,685	80,116	1,024,010
	- 전년대비증감	277,558	35,114	29,118	7,262	19,462	368,514
2009	총매출액	902,670	170,165	265,082	24,951	98,178	1,461,046
	- 전년대비증감	234,943	94,285	78,480	11,266	18,061	437,035
2010	총매출액	961,758	187,304	259,890	28,728	82,298	1,519,978
	- 전년대비증감	59,088	17,139	△5,192	3,777	△15,880	58,932

(2) 기업 규모별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후로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감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조사대상 규모 전체적으로는 1기업당 매출액 증가율이 2007년 28.1%, 2008년 22.8%, 2009년 20.0%, 2010년 19.9%로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표 3-15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매출액 증감(기업 규모별)

(단위 : 백만원, %)

년도	구 모	자금지원 전 1년		자금지원 후 1년		전후 증감		증감률	
		매출총액	1기업 평균	매출총액	1기업 평균	매출총액	1기업 평균	매출 총액	1기업 평균
2007	1~9인	124,381	1,045	168,221	1,402	43,840	357	35.2	34.1
	10~49인	334,713	3,188	450,635	4,173	115,922	985	34.6	30.9
	50인 이상	138,029	6,001	158,214	6,879	20,185	878	14.6	14.6
	전체	597,123	2,418	777,070	3,096	179,947	678	30.1	28.1
2008	1~9인	303,874	1,670	384,543	2,101	80,669	432	26.5	25.9
	10~49인	372,538	2,933	471,558	3,546	99,020	612	26.6	20.9
	50인 이상	151,837	6,327	182,620	7,609	30,783	1,283	20.3	20.3
	전체	828,249	2,487	1,038,721	3,055	210,472	568	25.4	22.8
2009	1~9인	200,916	990	255,170	1,227	54,254	237	27.0	24.0
	10~49인	618,890	3,310	758,964	3,995	140,074	685	22.6	20.7
	50인 이상	214,650	6,924	254,124	7,941	39,474	1,017	18.4	14.7
	전체	1,034,456	2,457	1,268,258	2,949	233,802	492	22.6	20.0
2010	1~9인	177,428	986	217,937	1,184	40,509	199	22.8	20.2
	10~49인	622,242	3,159	759,312	3,778	137,070	619	22.0	19.6
	50인 이상	214,167	6,693	264,870	8,026	50,703	1,334	23.7	19.9
	전체	1,013,837	2,479	1,242,119	2,972	228,282	493	22.5	19.9

기업 규모별 1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9인 업체는 2007년 34.1%에서 2010년 20.2%로, 10~49인 업체는 2007년 30.9%에서 2010년 19.6%로 각각 대폭 낮아진 반면, 50인 이상 업체는 2007년 14.6%에서 2010년 19.9%로 높아져 큰 규모의 업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1기업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앞의 생산액 증가율 현상과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기업 규모별 매출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1~9인 업체의 1기업당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10~49인 업체, 50인 이상 업체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자금지원이 고용에 미친 효과

(1) 업종별

① 지원자금 용자 1년 전과 후의 업종별 고용 증감효과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과 용자받고 자금을 운용한 1년 후의 고용 증감효과를 평가해 보자.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후로 고용 증감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조사대상 업종 전체적으로는 총고용이 13명 감소하여 0.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1기업당 평균으로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1기업당 높은 매출액 증가를 보인 업종은 제조관련업 7억 6,000만원, 건설업 7억 4,700만원, 서비스업 5억 7,700만원 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를 보인 업종은 제조업 4억 9,400만원, 운수업 2억 3,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서비스업 42.4%, 건설업 33.0% 순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제조관련업 22.0%, 운수업 20.1% 제조업 19.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관련업의 총고용이 64명, 1기업당 평균 2명이 감소하여 9.5%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건설업은 총고용이 87명, 1기업당 평균 1명이 감소하여 1.1%의 감소율을 보인 반면, 제조업은 1기업당 평균으로는 1명이 증가하였고, 총고용이 120명 증가하여 4.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운수업과 서비스업은 1기업당 평균인원은 불변이지만, 총고용이 각각 6명, 12명이 증가하여, 각각 3.5%, 1.8%의 증가율을 보였다.

결국, 지원자금 용자 1년 전과 후로 업종 전체로는 고용이 감소하였고, 제조관련업과 건설업은 고용이 감소하였지만, 제조업과 운수업, 서비스업은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16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고용 증감(업종별)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용자지원 전 1년 평균(A)	총고용	12,761	2,974	674	8,267	179	667
	1기업당	32	12	18	138	10	18
용자지원 후 1년 평균(B)	총고용	12,748	3,094	610	8,180	185	679
	1기업당	32	13	16	136	10	18
증감(B-A)	총고용	-13	120	-64	-87	6	12
	1기업당	0	1	-2	-1	0	0
증감률		-0.1	4.0	-9.5	-1.1	3.5	1.8

② 고용형태별 업종별 연평균인원 증감효과

자금지원을 받은 조사대상업체의 고용형태별 업종별 연평균 고용인원의 증감효과를 분석해 보자.

업종 전체로는 연평균 고용총인원이 2007년 9,002명, 2008년 12,535명, 2009년 14,182명, 2010년 13,82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8년은 3,533명, 2009년은 1,647명

4) 여기서 고용 증감률은 감축인원까지 고려한 순수 고용증감효과를 말한다.

< 표 3-17 > 조사대상기업의 업종별 고용 증감(연평균인원)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체	
2007	정규직	총인원	3,230	465	731	18	885	5,329
		1기업 평균	18	19	16	4	23	18
	비정규직	총인원	188	31	3,406	12	36	3,673
		1기업 평균	5	6	243	4	7	57
	합계	총인원	3,418	496	4,137	30	921	9,002
		1기업 평균	16	17	69	4	21	25
2008	정규직	총인원	3,781	488	904	263	1,104	6,540
		1기업 평균	16	15	15	20	23	17
	비정규직	총인원	161	35	5,716	14	69	5,995
		1기업 평균	3	5	286	5	9	66
	합계	총인원	3,942	523	6,620	277	1,173	12,535
		- 전년대비증감	524	27	2,483	247	252	3,533
		1기업 평균	13	13	82	17	21	26
		- 전년대비증감	△2	△3	13	14	△1	1
2009	정규직	총인원	4,755	696	1,173	324	1,150	8,098
		1기업 평균	16	15	14	20	23	16
	비정규직	총인원	287	136	5,558	19	84	6,084
		1기업 평균	4	11	179	5	9	45
	합계	총인원	5,042	832	6,731	343	1,234	14,182
		- 전년대비증감	1,100	309	111	66	61	1,647
		1기업 평균	13	14	60	17	21	22
		- 전년대비증감	0	1	△22	0	0	△3
2010	정규직	총인원	5,195	632	1,354	336	1,200	8,717
		1기업 평균	17	15	16	22	24	18
	비정규직	총인원	338	84	4,583	26	74	5,105
		1기업 평균	4	8	143	7	7	36
	합계	총인원	5,533	716	5,937	362	1,274	13,822
		- 전년대비증감	491	△116	△794	19	40	△360
		1기업 평균	14	14	51	19	21	22
		- 전년대비증감	1	△1	△9	2	0	△1

증가하였으나, 2010년은 360명 감소하였다. 1기업 연평균인원은 2007년 25명, 2008년 26명,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2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8년은 1명 증가하였으나 2009년은 3명이 감소하여 1기업 연평균인원은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운수업, 서비스업은 2010년까지 총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조관련업과 건설업은 2010년에 연평균 고용총인원이 감소하였다. 1기업당 연평균 고용인원은 운수업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008년, 제조업관련업은 2008년과 2010년, 건설업은 2009년과 2010년에 1기업당 연평균 고용인원이 각각 감소하였다.

(2) 기업 규모별

① 지원자금 용자 1년 전과 후의 기업 규모별 고용 증감효과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후로 기업규모별 고용 증감을 조사한 결과,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조사대상 규모 전체적으로는 2007년은 총고용이 970명, 1기업당 평균 고용은 3.4명 증가하여 1기업당 평균 18.5% 증가율을 보였고, 2008년은 총고용이 978명, 1기업당 평균 고용이 2.4명 증가하여 1기업당 평균 15.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은 총고용이 400명 증가하였지만, 1기업당 평균 고용은 0.3명 감소하여 0.8%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010년은 총고용이 406명 증가하였지만, 1기업당 평균 고용은 역시 0.3명 감소하여 0.9%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1기업당 평균 고용은 감소하였지만, 이는 지원받은 업체수가 많아진 점을 고려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지원받은 업체의 용자받기 1년 전후의 총고용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증가한 총고용도 2008년 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09년과 2010년은 증가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업 규모별 1기업 평균 고용 증가율은 1~9인 업체는 2007년 20.1%에서 2010년 2.5%로 증가율이 축소된 반면, 50인 이상 업체는 2007년 8.8%에서 2010년 30.8%로

대폭 확대되어 이들 규모의 업체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0~49인 업체는 2007년 총고용 418명, 1기업당 평균 고용이 4.0명 증가하여 25.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0년은 오히려 총고용이 473명, 기업당 평균 고용이 3.6명 감소하여 7.4%의 감소율을 보여 10~49인 업체의 고용은 년도가 지나면서 고용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 규모별 고용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2007년은 1~9인 업체와 10~49인 업체의 고용증가율이 높았지만, 2008년부터는 50인 이상 업체의 고용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표 3-18 > 지원자금 용자 전과 후의 고용 증감(기업 규모별)

(단위 : 명, %)

년도	규 모	자금지원 전 1년		자금지원 후 1년		전후 증감		증감률	
		총고용	1기업 평균	총고용	1기업 평균	총고용	1기업 평균	총고용	1기업 평균
2007	1~9인	563	5.2	713	6.3	150	1.0	26.6	20.0
	10~49인	1,634	15.7	2,052	19.7	418	4.0	25.6	25.6
	50인 이상	2,096	99.8	2,498	108.6	402	8.8	19.2	8.8
	전체	4,293	18.4	5,263	21.8	970	3.4	22.6	18.5
2008	1~9인	813	5.1	949	5.6	136	0.5	16.7	10.5
	10~49인	1,974	15.4	2,311	17.6	337	2.2	17.1	14.4
	50인 이상	1,990	94.8	2,495	108.5	505	13.7	25.4	14.5
	전체	4,777	15.5	5,755	17.8	978	2.4	20.5	15.3
2009	1~9인	935	5.1	1,050	5.5	115	0.4	12.3	7.0
	10~49인	9,231	51.3	8,900	48.1	△331	△3.2	△3.6	△6.2
	50인 이상	2,195	75.7	2,811	90.7	616	15.0	28.1	19.8
	전체	12,361	31.6	12,761	31.4	400	△0.3	3.2	△0.8
2010	1~9인	802	5.1	869	5.2	67	0.1	8.4	2.5
	10~49인	9,454	49.0	8,981	45.4	△473	△3.6	△5.0	△7.4
	50인 이상	2,038	70.3	2,850	91.9	812	21.7	39.8	30.8
	전체	12,294	32.4	12,700	32.2	406	△0.3	3.3	△0.9

② 고용형태별 규모별 연평균인원 증감효과

자금지원을 받은 조사대상업체의 고용형태별 규모별 연평균 고용인원의 증감효과를 분석해 보자.5)

1~9인 업체는 연평균총고용인원이 2007년 927명, 2008년 1,390명, 2009년 1,676명, 2010년 1,511명으로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기업당 연평균고용인원은 2007명 4.5명, 2008년 4.5명, 2009년 4.4명, 2010년 4.3명으로 2009년부터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다.

10~19인 업체는 연평균총고용인원이 2007년 2,558명, 2008년 3,207명, 2009년 4,228명, 2010년 4,71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기업당 연평균고용인원은 2007명 20.0명, 2008년 20.8명, 2009년 19.6명, 2010년 19.5명으로 2008년까지 근소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0년까지는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다.

50~99인 이상 업체는 연평균총고용인원이 2007년 842명, 2008년 874명, 2009년 1,450명, 2010년 1,71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기업당 연평균고용인원도 2007명 64.8명, 2008년 67.2명, 2009년 65.9명, 2010년 68.7명으로 2010년까지 추세적으로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

100인 이상 업체는 연평균총고용인원이 2007년 4,772명, 2008년 7,217명, 2009년 7,018명, 2010년 6,117명으로 200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고 있고, 1기업당 연평균고용인원은 2007명 340.9명, 2008년 451.1명, 2009년 412.8명, 2010년 382.3명으로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0년까지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연평균총고용인원은 10~19인 업체와 50~59인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9인 업체와 100인 이상업체는 최근 2010년 들어 연평균총고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고용인원은 1~9인 업체와 10~19인 업체, 100인 이상 업체는 2010년 들어 근소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59인 업체는 추세적으로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다.

5) 앞의 업종별 연평균총고용인원과 1기업당 연평균고용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설문지에 업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업 규모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소수 있기 때문이다.

< 표 3-19 > 조사대상기업의 규모별 고용 증감(연평균인원)

(단위 : 명)

연도	규모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총인원	1기업평균	총인원	1기업평균	총인원	1기업평균
2007	1~9인	774	5.0	153	3.1	927	4.5
	10~49인	2,403	20.2	155	17.2	2,558	20.0
	50~99인	842	64.8	0	0.0	842	64.8
	100인 이상	1,407	156.3	3,365	673.0	4,772	340.9
	합계	5,426	18.3	3,673	57.4	9,099	25.3
2008	1~9인	1,177	5.1	213	2.8	1,390	4.5
	10~49인	3,052	21.0	155	17.2	3,207	20.8
	50~99인	874	67.2	0	0.0	874	67.2
	100인 이상	1,590	159.0	5,627	937.8	7,217	451.1
	합계	6,693	16.8	5,995	65.9	12,688	25.9
	전년대비증감	1,267	△1.6	2,322	8.5	3,589	0.6
2009	1~9인	1,366	5.0	310	2.9	1,676	4.4
	10~49인	3,847	19.7	381	18.1	4,228	19.6
	50~99인	1,450	65.9	0	0.0	1,450	65.9
	100인 이상	1,625	147.7	5,393	898.8	7,018	412.8
	합계	8,288	16.5	6,084	45.4	14,372	22.6
	전년대비증감	1,595	△0.2	89	△20.5	1,684	△3.3
2010	1~9인	1,190	4.9	321	2.9	1,511	4.3
	10~49인	4,331	19.8	381	16.6	4,712	19.5
	50~99인	1,658	69.1	60	60.0	1,718	68.7
	100인 이상	1,774	161.3	4,343	868.6	6,117	382.3
	합계	8,953	18.1	5,105	36.2	14,058	22.1
	전년대비증감	665	1.5	△979	△9.2	△314	△0.6

(3)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신규인력 증감

앞의 분석은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과 후의 효과이기 때문에, 기간 중 감축

인원까지 고려된 고용증감의 순수효과이므로,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 되지 않는다. 따라서 더 정확한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축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신규인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1기업체당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신규인력은 2007년 4.7명, 2008년 4.3명, 2009년 5.5명, 2010년 4.7명으로서 나타나 대체로 4.3명에서 4.7명 규모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2007년 3.2명, 2008년 3.5명, 2009년 4.3명, 2010년 3.6명이고, 비정규직은 2007년 10.1명, 2008년 7.9명, 2009년 10.8명, 2010년 8.9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원자금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3-20 >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신규인력

(단위 : 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정규직 (A)	총인원	145	292	662	561
	1기업당	3.2	3.5	4.3	3.6
비정규직 (B)	총인원	121	135	358	364
	1기업당	10.1	7.9	10.8	8.9
전체 (A+B)	총인원	266	427	1,020	925
	1기업당	4.7	4.3	5.5	4.7

다음으로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1기업체당 신규인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2007년 9.4명, 2008년 6.9명, 2009년 10.4명, 2010년 8.8명으로서 가장 많이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제조업은 2007년 4.7명, 2008년 4.3명, 2009년 5.5명, 2010년 4.7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서비스업은 2007년 2.6명, 2008년 7.3명, 2009년 5.4명, 2010년 4.4명이고, 제조관련업은 2007년 5.8명, 2008년 2.5명, 2009년 3.1명, 2010년 4.5명, 운수업은 2007년 3.0명, 2008년 2.3명, 2009년 2.5명, 2010년 3.2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직종별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1기업체당 채용한 신규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건설업분야의 경우 주로 단기간의 현장 투입인력으로 활용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3-21 > 지원자금으로 채용한 연도별 업종별 신규인력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2007	정규직	총인원	145	87	17	30	1	10
		1기업당	3.2	3.1	5.7	3.3	1.0	2.5
	비정규직	총인원	121	9	12	92	5	3
		1기업당	10.1	2.3	6.0	23.0	5.0	3.0
	전체	총인원	266	96	29	122	6	13
		1기업당	4.7	3.0	5.8	9.4	3.0	2.6
2008	정규직	총인원	290	148	7	41	5	89
		1기업당	3.5	3.1	1.4	2.6	2.5	8.1
	비정규직	총인원	135	18	13	96	2	6
		1기업당	7.9	2.6	4.3	24.0	2.0	3.0
	전체	총인원	425	166	20	137	7	95
		1기업당	4.3	3.0	2.5	6.9	2.3	7.3
2009	정규직	총인원	653	398	33	89	7	126
		1기업당	4.3	4.6	2.4	3.6	2.3	5.5
	비정규직	총인원	358	65	26	254	3	10
		1기업당	10.8	3.8	5.2	31.8	3.0	5.0
	전체	총인원	1011	463	59	343	10	136
		1기업당	5.5	4.5	3.1	10.4	2.5	5.4
2010	정규직	총인원	543	377	33	69	11	53
		1기업당	3.6	3.8	3.0	2.8	2.8	4.4
	비정규직	총인원	364	78	35	239	8	4
		1기업당	8.9	3.3	8.8	23.9	4.0	4.0
	전체	총인원	907	455	68	308	19	57
		1기업당	4.7	3.7	4.5	8.8	3.2	4.4

3. 자금지원이 고용 증감에 미친 사유 분석

1) 지원자금 활용 용도

지원자금을 용자받기 1년 전과 후의 순수효과만을 분석한 결과, 생산과 매출액 증가에는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용 창출에 미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사유를 우선, 용자받은 지원자금의 활용 용도를 통하여 분석해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업종 전체로는 지원자금을 주로 원자재 등 재료비에 37.7%, 시설자금 21.8%, 기술개발 13.8% 순으로 투입하여 활용하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생산액이나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며, 따라서 지원자금이 생산이나 매출액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표 3-22 > 지원자금의 활용 용도

(단위 : 개, %)

구 분	전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시설자금	192	21.8	124	21.1	18	18.8	23	15.9	12	42.9	15	15.3
인력확보	77	8.8	38	6.5	9	9.4	11	7.6	2	7.1	17	17.3
직원교육훈련	8	0.9	2	0.3	2	2.1	3	2.1	0	0.0	1	1.0
기술개발	121	13.8	77	13.1	14	14.6	5	3.4	0	0.0	25	25.5
원자재 등 재료비	331	37.7	215	36.5	30	31.3	68	46.9	4	14.3	14	14.3
판로개척등 마케팅	31	3.5	15	2.5	3	3.1	5	3.4	4	14.3	4	4.1
제품생산	85	9.7	68	11.5	9	9.4	5	3.4	0	0.0	3	3.1
수출관련	6	0.7	6	1.0	0	0.0	0	0.0	0	0.0	0	0.0
홍보등 판촉활동	4	0.5	0	0.0	2	2.1	1	0.7	0	0.0	1	1.0
일반관리비	8	0.9	41	7.0	8	8.3	19	13.1	1	3.6	16	16.3
기타	16	1.8	3	0.5	1	1.0	5	3.4	5	17.9	2	2.0
합계	879	100.0	589	100.0	96	100.0	145	100.0	28	100.0	98	100.0

주 : 다중응답분석

반면, 지원자금을 인력확보에 투입한 비중은 8.8%에 불과하여 정책지원금이 고용 창출에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용자받은 지원자금을 주로 재료비, 시설자금, 기술개발 등 생산이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주로 투입하고 있는 반면, 인력 확보 등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투입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한편,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원자재 등 재료비 36.5%, 시설자금 21.1%, 기술개발에 13.1% 등을 투입하였고, 제조관련업 역시 원자재 등 재료비 31.3%, 시설자금 18.8%, 기술개발 14.6% 등을 투입하여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건설업은 원자재 등 재료비 46.9%, 시설자금 15.9%, 일반관리비 13.1% 등에 투입하였고, 운수업은 시설자금 42.9%, 기타 17.9%, 원자재 등 재료비 14.3%, 판로개척 등 마케팅(14.3% 등에, 서비스업은 기술개발 25.5%, 인력확보 17.3%, 일반관리비 16.3%, 시설자금 15.3% 등에 각각 투입하여 이들 업종에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2) 인건비 활용 용도

지원자금을 인건비분야에 투입하여 활용한 용도를 보면, 주로 기존인력의 인건비 보전에 활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신규인력 확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입하여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로는 지원자금을 기존인력을 보전하는데 65.0%를 투입하였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신규인력을 확보하는데 32.6%를 투입하여, 지원자금을 대부분 기존인력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관련업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신규인력 확보에 44.0%를 투입하여 비교적 높은 고용창출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에서도 38.2%를 신규인력 확보에 투입하였다.

결국, 지원자금을 대부분 기존인력 인건비 보전에 활용하고, 신규인력 확보에는

적은 금액을 투입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3-23 > 지원자금의 인건비 활용 용도

(단위 : 개, %)

구 분		기존인력	신규	신규 임시직 등	인턴사원	기타	합계
		인건비 보전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 채용	채용		
전체	빈도수	379	158	32	8	6	583
	구성비	65.0	27.1	5.5	1.4	1.0	100.0
제조업	빈도수	230	94	16	3	4	347
	구성비	66.3	27.1	4.6	0.9	1.2	100.0
제조 관련업	빈도수	26	15	7	2	0	50
	구성비	52.0	30.0	14.0	4.0	0.0	100.0
건설업	빈도수	69	18	8	1	2	98
	구성비	70.4	18.4	8.2	1.0	2.0	100.0
운수업	빈도수	14	5	1	0	0	20
	구성비	70.0	25.0	5.0	0.0	0.0	100.0
서비스업	빈도수	40	26	0	2	0	68
	구성비	58.8	38.2	0.0	2.9	0.0	100.0

3) 고용 창출효과 분석결과의 유의점

위의 분석을 종합할 때, 지원자금의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 지원자금의 고용에 미친 정성적 효과를 볼 때, 지원자금이 고용에 미친 효과가 대체로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더구나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도 지원자금의 혜택이 없었더라면, 구조조정에 의해 감축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자금으로 기존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고용을 지속하는 것도 일자리 유지로서 고용창출효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자금으로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것만 고용창출효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기존인력의 일자리 유지를 통한 고용을 지속하는 것도 고용창출효과로 간주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원자금의 고용창출효과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다.

제 4 장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제1절 지원시책 및 대출관련 개선과제

제2절 자금지원의 적정 규모 및 횟수 개선과제

제3절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과제

제 4 장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제1절 지원시책 및 대출 관련 개선과제

1. 자금지원 시책 관련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개선사항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시책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업종 전체로는 무엇보다도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이 단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상환실적 및 기업의 경영상태 전망 평가를 통하여 기업별 차등적으로 애초에 대출기간을 길게 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원자금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은 앞서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 지원규모의 확대 요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융자기간도 융자 횟수 제한 없이 융자 후 1년 경과하면 재융자하는 방식을 추진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세 번째는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가 복잡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강화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는 지원절차와 구비서류 준비 등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대출금리가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론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할 것이나, 앞에서 분석한 바로는 타 광역시에 비해 대전광역시의

정책지원자금 금리는 평균수준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구나 너무 낮은 금리는 중소기업에게 지원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타성에 익숙하게 될고 자금압박의 위협요인에 대한 긴장된 경영효율 개선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금리에 대하여는 기업의 입장과 지원 주체인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기타 애로요인으로는 자금지원정보의 부족, 실적위주의 평가기준, 담보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업종 전체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은 자금지원정보의 부족을 중요한 불만사항 중의 하나로 지적하였으며, 서비스업은 실적위주의 평가기준도 중요한 불만사항으로 지적하였다.

< 표 4-1 > 정책자금 지원시책의 불만사항

(단위 : 개, %)

구 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대출기간이 단기	129	30.1	16	23.5	31	26.3	9	33.3	19	26.0	204	28.5
대출금리가 높음	48	11.2	7	10.3	14	11.9	3	11.1	6	8.2	78	10.9
자금지원정보 부족	33	7.7	11	16.2	16	13.6	3	11.1	6	8.2	69	9.7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	58	13.5	11	16.2	17	14.4	3	11.1	13	17.8	102	14.3
실적위주의 평가기준	30	7.0	3	4.4	12	10.2	0	0.0	7	9.6	52	7.3
투자보다 융자위주 지원	19	4.4	5	7.4	4	3.4	2	7.4	5	6.8	35	4.9
자금지원규모 부족	88	20.5	11	16.2	16	13.6	5	18.5	11	15.1	131	18.3
담보부족	19	4.4	4	5.9	7	5.9	2	7.4	4	5.5	36	5.0
기타	5	1.2	0	0.0	1	0.8	0	0.0	2	2.7	8	1.1
합계	429	100.0	68	100.0	118	100.0	27	100.0	73	100.0	715	100.0

2) 시급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시책 중에서도 시급한 것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시급히 추진해 주기를 원하는 시책은 운전자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자금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판매까지 기업경영 운전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에서 분석한 업종별 지원자금 확대 요구액을 참고하여 업종별 규모별 한도액 가감을 통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을 차등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보증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CEO의 자산담보 대출은 창업과 경영과정에서 이미 한도가 찬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가치보험제도 등을 통하여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하거나 또는 CEO의 신용담보 보증을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자금지원의 확대이다. 경기가 호전되거나 신기술 개발에 의한 생산의 확대가 시급할 때,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시기적절한 상품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자금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만기대출금 상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위 애로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출기간이 단기라는 점이 가장 불만 사항이었고, 융자기간을 횡수 제한 없이 융자 후 1년 경과하면 재융자하는 방식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기업별 상환실적을 고려하고 향후 기업경기 전망을 평가한 후, 적격업체에 대하여 상환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판로개척, 마케팅, 판촉 등 분야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도 소수의견이 있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운전자금의 확대가 가장 시급하며,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에서는 대체로 업종 전체의 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판로개척, 마케팅, 판촉 등 지원 확대도 시급한 정책으로 들고 있다.

< 표 4-2 > 시급한 자금지원 정책

(단위 : 개, %)

구 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신용보증지원 확대	76	17.0	20	29.0	32	26.4	4	14.3	19	28.8	151	20.7
운전자금지원 확대	172	38.5	23	33.3	39	32.2	15	53.6	27	40.9	276	37.8
판로개척,마케팅, 판촉 등 지원 확대	27	6.0	7	10.1	5	4.1	1	3.6	9	13.6	49	6.7
시설자금지원 확대	88	19.7	15	21.7	15	12.4	3	10.7	5	7.6	126	17.2
무역금융지원 확대	6	1.3	1	1.4	0	0.0	0	0.0	0	0.0	7	1.0
만기대출금 상환 연장	65	14.5	3	4.3	24	19.8	4	14.3	6	9.1	102	14.0
상업어음할인 확대	2	0.4	0	0.0	2	1.7	0	0.0	0	0.0	4	0.5
어음보험지원 확대	4	0.9	0	0.0	1	0.8	0	0.0	0	0.0	5	0.7
부도어음 상환요구 자체	4	0.9	0	0.0	3	2.5	0	0.0	0	0.0	7	1.0
기타	3	0.7	0	0.0	0	0.0	1	3.6	0	0.0	4	0.5
합계	447	100.0	69	100.0	121	100.0	28	100.0	66	100.0	731	100.0

3)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

대전광역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책을 추진하면서,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 우선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야 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에게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를 조사한 결과, 우선 모든 업종에 걸쳐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도 대표적인 지원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운수업과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산공정 개선, 생산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을 지적하고 있다. 창업과 경영안정 등에 대부분의 자금을 소요하면서 시설확대나 판로개척 등 부분에서 자금압박을 받고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파악된다. 운수업은 신규설비투자자금, 서비스업은 기술개발자금을 지적하고 있다.

< 표 4-3 >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자금지원 분야

(단위 : 점, %)

구 분	전 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창업지원	74	4.9	6	38	4.1	6	5	3.8	6
기술개발	252	16.7	3	156	16.8	3	19	14.4	3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자동화 등)	266	17.6	2	181	19.5	2	30	22.7	2
신규 설비투자	163	10.8	4	120	12.9	4	12	9.1	4
기술인력 양성	107	7.1	5	48	5.2	5	12	9.1	4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632	41.8	1	369	39.7	1	54	40.9	1
해외투자·수출 촉진	17	1.1	7	16	1.7	7	0	0.0	7
기타	1	0.1	8	1	0.1	8	0	0.0	7
전체	1,512	100.0		929	100.0		132	100.0	

구 분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창업지원	19	7.9	5	3	5.1	4	9	5.9	4
기술개발	26	10.8	4	3	5.1	4	48	31.6	2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자동화 등)	40	16.7	2	6	10.2	3	9	5.9	4
신규설비 투자	11	4.6	6	13	22.0	2	7	4.6	6
기술인력 양성	30	12.5	3	0	0.0	6	17	11.2	3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113	47.1	1	34	57.6	1	62	40.8	1
해외투자·수출 촉진	1	0.4	7	0	0.0	6	0	0.0	7
기타	0	0.0	8	0	0.0	6	0	0.0	7
전체	240	100.0		59	100.0		152	100.0	

세 번째는 주로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발전이 기술개발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기술인력의 양성, 운수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신규설비 투자자금을 중점 자금지원분야로 들고 있다. 창업 후 도약 단계에서 생산설비 등 신규 설비투자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설비 투자 확대로 도약이 가능하며 결국 안정적인 정착단계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도약을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자금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업과 운수업은 기술개발 자금, 서비스업은 창업지원자금과 생산성 향상자금 등도 중점을 두어 지원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지원자금 대출 관련

1) 지원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한 우선배분기준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도 자금지원 효과를 증진하는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공정하다는 판단 기준은 모호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 업체들이 가장 많이 인정하는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대전광역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업체들로부터 조사한 결과, 업종 전체로는 무엇보다도 응답업체들의 40.3%가 사업전망을 추천하고 있다. 사업전망이 좋은 업체들은 생산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전망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된 사업전망이 기업들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평가기관으로 부터의 사업성 평가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점도 이에 따른 추진과제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들고 있다.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신용이 좋은 업체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성을 들고 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기업의 경영능력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제조관련업, 서비스업은 업종 전체의 의견과 같이 기업의 사업전망을 사업체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으로 들고 있는 반면, 건설업과 운수업은 신용상태를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으로 들고 있다.

< 표 4-4 > 지원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

(단위 : 개, %)

구 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 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재무상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술성	12	13.6	4	18.2	2	9.1	0	0.0	1	16.7	19	13.7
기업경영능력	11	12.5	2	9.1	4	18.2	0	0.0	0	0.0	17	12.2
사업전망	40	45.5	8	36.4	2	9.1	1	33.3	5	83.3	56	40.3
신용상태	25	28.4	6	27.3	14	63.6	2	66.7	0	0.0	47	33.8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합계	88	100.0	22	100.0	22	100.0	3	100.0	6	100.0	139	100.0

2) 은행에서 자금대출시 개선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대전광역시에 신청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원업체를 선정하여 지원금액 및 상환기간, 이차보전 금리 혜택을 결정하고,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선정되어 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대출을 할 때,

지원자금의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업종 전체로는 먼저, 신용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가장 많은 예외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중 정책지원금리의 혜택이 공제되지만, 그렇더라도 은행금리가 높으면 정부의 지원혜택이 그만큼 상쇄된다. 세 번째는 대출규모가 적다는 점이다. 물론 대전광역시에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미리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만의 불만사항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정부의 지원자금 한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담보평가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신용대출이 아닌 유형자산을 담보로 요구하면서 유형자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여신이 대체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거래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업종 전체의 의견과 유사하지만, 제조관련업의 경우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불만사항을 고려하면,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를 지양하고 가급적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정책지원금리 혜택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대출금 규모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한도액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에 근접한 자금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자산가치를 과도하게 낮게 평가함으로써 대출한도를 낮추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출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대전광역시와 대출을 실시하는 은행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4-5 > 은행에서 자금대출시 가장 불만인 사항

(단위: 점, %)

구분	전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신용대출곤란 및 담보요구	528	36.6	1	316	35.1	1	29	25.7	2
꺾기 요구가 심함	37	2.6	6	28	3.1	6	1	0.9	8
대출금리가 높음	406	28.1	2	252	28.0	2	39	34.5	1
대출규모가 적음	187	13.0	3	119	13.2	3	20	17.7	3
어음할인이 곤란	7	0.5	10	4	0.4	10	0	0.0	11
담보평가비율이 낮음	99	6.9	4	73	8.1	4	7	6.2	5
담당자 재량권 부족 및 의사결정이 늦음	27	1.9	8	17	1.9	8	1	0.9	8
거래절차가 복잡	98	6.8	5	62	6.9	5	11	9.7	4
정보제공서비스 부족	34	2.4	7	20	2.2	7	2	1.8	6
담당자의 불친절 및 반대급부 요구	5	0.3	11	2	0.2	11	1	0.9	8
기타	15	1.0	9	7	0.8	9	2	1.8	6
합계	1443	100.0		900	100.0		113	100.0	

구분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빈도점수	구성비	순위
신용대출곤란 및 담보요구	91	38.7	1	29	50.9	1	63	45.7	1
꺾기 요구가 심함	4	1.7	8	2	3.5	5	2	1.4	8
대출금리가 높음	69	29.4	2	16	28.1	2	30	21.7	2
대출규모가 적음	31	13.2	3	1	1.8	7	16	11.6	3
어음할인이 곤란	3	1.3	9	0	0.0	9	0	0.0	10
담보평가비율이 낮음	8	3.4	6	3	5.3	3	8	5.8	4
담당자 재량권 부족 및 의사결정이 늦음	6	2.6	7	0	0.0	9	3	2.2	7
거래절차가 복잡	14	6.0	4	3	5.3	3	8	5.8	4
정보제공서비스 부족	9	3.8	5	1	1.8	7	2	1.4	8
담당자의 불친절 및 반대급부 요구	0	0.0	10	2	3.5	5	0	0.0	10
기타	0	0.0	10	0	0.0	9	6	4.3	6
합계	235	100.0		57	100.0		138	100.0	

3) 기타 건의사항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당국인 대전광역시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위에서 분석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 지원자금의 확대, 거래절차 간소화 등이 대부분이고 대출기간 연장 및 재신청을 용이하게 해 줄 것, 지원자금 횡수 제한 폐지 대출금리 인하 등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며, 다만, 특이한 건의사항은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것, 차등금리 지원제도 활성화, 재용자를 같은 금리로 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 표 4-6 > 기타 건의사항

(단위: 개, %)

건의내용	빈도수	구성비
규제 완화, 거래절차 간소화	8	18.6
대출금리 인하	3	7.0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재신청을 쉽게해야 함	4	9.3
무리한담보요구 개선	1	2.3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4	9.3
자금지원 횡수제한 폐지	3	7.0
자금지원 확대	17	39.5
재용자를 같은 금리로 해야함	2	4.7
차등금리지원제도 활성화	1	2.3
합계	43	100.0

제2절 자금지원의 적정 규모 및 횟수 개선과제

1. 자금지원 적정 규모

1) 경영안정자금

(1) 기업 규모별

경영안정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기업 규모별로 조사한 결과, 규모 전체로는 2,000억원이 41.0%, 2,500억원이 30.7%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의 71.7%가 지원자금 적정 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기업 규모를 고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규모에서 2,000억원 수준이 가장 많고, 이어서 2,500억원 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절반이 2,000억원을 적정한 지원금 규모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의 적정 지원규모는 최소 2,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7 > 경영안정자금 적정 지원규모(기업규모별)

(단위 : 개, %)

구분	1~9인		10~49인		50인 이상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1,000억	20	9.9	21	8.9	2	5.4	43	9.0
1,500억	36	17.8	48	20.3	8	21.6	92	19.3
2,000억	84	41.6	92	38.8	19	51.4	195	41.0
2,500억	62	30.7	76	32.1	8	21.6	146	30.7
합계	202	100.0	237	100.0	37	100.0	476	100.0

(2) 업종별

경영안정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업종 전체로는 2,000억원이 40.2%, 2,500억원이 30.4%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의 70.6%가 적정한 지원규모를 2,000억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기업 규모를 고려한 경우를 보면, 제조업과 제조관련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000억원을 가장 적정한 지원금으로 응답하였으며, 운수업은 2,500억원이 가장 적정한 지원금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의 적정 지원규모는 운수업은 2,500억원, 기타 업종은 2,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8 > 경영안정자금 적정 지원규모(업종별)

(단위 : 개, %)

구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1,000억	21	6.9	7	15.2	5	6.0	5	26.3	10	19.6	48	9.5
1,500억	60	19.7	9	19.6	19	22.9	1	5.3	11	21.6	100	19.9
2,000억	119	39.1	18	39.1	40	48.2	5	26.3	20	39.2	202	40.2
2,500억	104	34.2	12	26.1	19	22.9	8	42.1	10	19.6	153	30.4
합계	304	100.0	46	100.0	83	100.0	19	100.0	51	100.0	503	100.0

2)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 기업 규모별

6) 기업규모별과 업종별 전체 합계의 구성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응답업체가 기업규모 또는 업종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기업 규모별로 조사한 결과, 규모 전체로는 1,000억원이 38.5%, 700억원이 32.7%, 500억원이 23.6%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를 고려하면 1~9인 업체와 10~49인 업체의 경우, 1,000억원이 가장 많고, 이어서 700억원, 5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더 큰 50인 이상 업체에서는 오히려 700억원이 41.7%로 가장 많고, 1,000억원이 36.1%로 더 작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규모가 큰 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자금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더욱 큰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9인 미만업체의 경우 적정한 지원규모는 1,000억원, 50인 이상 업체에 대하여는 700억원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9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적정 지원규모(기업규모별)

(단위 : 개, %)

구 분	1~9인		10~49인		50인 이상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300억	16	8.0	8	3.5	0	0.0	24	5.2
500억	43	21.5	58	25.7	8	22.2	109	23.6
700억	62	31.0	74	32.7	15	41.7	151	32.7
1,000억	79	39.5	86	38.1	13	36.1	178	38.5
합계	200	100.0	226	100.0	36	100.0	462	100.0

(2) 업종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업종 전체로는 1,000억원이 36.8%로 가장 많고, 700억원이 32.5%, 500억원이 2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을 고려하면 제조업은 1,000억원이 41.5%로 가장 많고, 제조관련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700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운수업은 500억원이 38.9로 가장 많고, 300억원이 27.8%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는 제조업은 1,000억원 수준, 제조관련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700억원, 운수업은 500억원 수준으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0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적정 지원규모(업종별)

(단위 : 개, %)

구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300억	10	3.3	4	9.1	3	3.7	5	27.8	5	10.0	27	5.5
500억	69	23.1	14	31.8	21	25.9	7	38.9	13	26.0	124	25.2
700억	96	32.1	14	31.8	30	37.0	3	16.7	17	34.0	160	32.5
1,000억	124	41.5	12	27.3	27	33.3	3	16.7	15	30.0	181	36.8
합계	299	100.0	44	100.0	81	100.0	18	100.0	50	100.0	492	100.0

3) 구매조건생산자금

(1) 기업 규모별

구매조건생산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기업 규모별로 조사한 결과, 규모 전체로는 400억원이 31.4%, 200억원이 31.0%, 300억원이 26.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를 고려하면, 1~9인 업체는 400억원이 가장 많고, 10~49인 업체와 50인 이상 업체는 200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부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자금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더욱 큰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인 업체에 대한 구매조건생산자금의 적정 지원규모는 400억원, 10인 이상 업체의 경우는 300억원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1 > 구매조건생산자금 적정 지원규모(기업규모별)

(단위 : 개, %)

구 분	1~9인		10~49인		50인 이상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100억	24	11.8	24	10.7	3	8.3	51	11.0
200억	60	29.4	70	31.1	14	38.9	144	31.0
300억	48	23.5	66	29.3	10	27.8	124	26.7
400억	72	35.3	65	28.9	9	25.0	146	31.4
합계	204	100.0	225	100.0	36	100.0	465	100.0

(2) 업종별

구매조건생산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를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업종 전체로는 200억원이 31.8%로 가장 많고, 이어서 400억원이 30.6%, 300억원이 26.7%, 100억원이 10.9%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을 고려하면 제조업은 400억원이 36.7%로 가장 많고,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은 각각 37.8%, 37.0%, 38.9%, 36.0%로 200억원을 가장 적정한 지원금규모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조건생산자금의 적정한 지원금 규모는 제조업은 400억원 수준,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은 200억원 수준으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2 > 구매조건생산자금 적정 지원규모(업종별)

(단위 : 개, %)

구분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전체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100억	23	7.7	7	15.6	7	8.6	6	33.3	11	22.0	54	10.9
200억	85	28.3	17	37.8	30	37.0	7	38.9	18	36.0	157	31.8
300억	82	27.3	11	24.4	23	28.4	2	11.1	14	28.0	132	26.7
400억	110	36.7	10	22.2	21	25.9	3	16.7	7	14.0	151	30.6
합계	300	100.0	45	100.0	81	100.0	18	100.0	50	100.0	494	100.0

2. 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전광역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도록 현재 업체당 3회(최대 6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기업체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업종 전체로는 횟수 제한 없이 용자 후 1년 경과하면 재용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횟수 제한 없이 용자 후 1년 경과하면 재용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응답이 업종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지만, 최소 52.8%(건설업)에서 최대 61.7%(제조업)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금지원 횟수는 업종을 구분하지 말고 전체 기업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용자 후 1년 경과하면 재용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13 > 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

(단위 : 개, %)

구 분	전 체		제조업		제조관련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빈도수	구성비
1회 제한	3	0.6	3	1.0	0	0.0	0	0.0	0	0.0	0	0.0
2회 제한	14	2.7	5	1.6	2	4.2	4	4.5	1	5.0	2	3.7
3회 제한	98	18.7	46	14.7	11	22.9	22	24.7	4	20.0	15	27.8
4회 제한	82	15.6	56	17.9	7	14.6	13	14.6	2	10.0	4	7.4
재용자 ¹⁾	312	59.5	193	61.7	28	58.3	47	52.8	12	60.0	32	59.3
기타	15	2.9	10	3.2	0	0.0	3	3.4	1	5.0	1	1.9
합 계	524	100.0	313	100.0	48	100.0	89	100.0	20	100.0	54	100.0

주 1)은 횟수 제한 없이 용자 후 1년 경과 후 재용자하는 경우임.

제3절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과제

1.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조건

1) 민간 금융과의 경합을 피하고 보완·협력관계 유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혹은 부가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고객층과의 경합이 적을수록 자금지원의 정책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자금과 민간금융 간 경합을 피하고 보완·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초기 기업, 소기업 등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 및 특정 전략산업의 중소기업 등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정책성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신용보증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이 민간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장기 설비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자금을 직접대출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 공급기관의 대출심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정책성과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넷째, 신용평가 최우량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신용보증 지원에서의 'credit elsewhere' 조건도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업당 대출한도를 설정하거나 후순위대출 제도 등의 도입을 확대하여 정책자금의 민간자금 유인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간 중복지원 억제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책자금과 신

용보증지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BDC의 지원자금은 대출한도 500만달러(\$) 이하의 대규모 자금지원인 데 비하여, 산업성의 신용보증지원은 대출한도 25만달러 이하 소액·자산취득(담보제공) 자금으로 구별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시설자금, 신용보증지원은 운전자금 지원으로 구분되며, 정부계 금융기관이 신용보증 지원을 이용하는 실적이 매우 작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복 지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의 약 20%는 신용보증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대출과 신용보증지원 간 중복 지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간접대출 및 위탁보증의 실효성 제고

독일과 미국에서와 같이 대출 심사 및 신용보증 심사를 민간대출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은행이 정책자금 심사 및 신용보증 심사를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보완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독일 Kfw가 시행 중인 창업기업 및 지방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분담 특례제도, 후순위대출제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의 PLP 제도 및 'credit elsewhere' 심사요건 등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보완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접대출(대리대출)의 경우에는 독일 Kfw 및 미국 신용보증지원제도에서와 같은 보완제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은행 일반대출과 정책자금 간접대출 간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의 대리대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직접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중소기업 자금지원체계 개선

여기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역 중소기업금융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논의는 경제위기시보다는 평상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신용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탁보증제도 활용 확대

앞의 조사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제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신용보증제도 운용방식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 부분보증비용, 보증대상 업종, 심사항목 등 기본원칙을 정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한 후 보증기관과 위험을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 보증을 의뢰하는 위탁보증방식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위탁보증방식이 활성화되면 은행권의 대출심사능력의 제고, 사후 모니터링의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생산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금융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만, 위탁 보증방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이 사업성을 평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일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탁 보증방식을 통해 보증을 공급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이에 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인프라 발전 정도, 금융기관의 기술평가능력의 개선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탁 보증방식을 통해 보증을 공급하는 부분을 서서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탁 보증방식 확대 초기에는 은행이 기존 부실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을 신청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은 주기적으로 보증사고율 등을 평가하여 보증사고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금융기관

에 대해서는 보증권한의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대출심사능력이 미흡한 경우 위탁보증방식의 효과는 직접보증방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심사능력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보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2)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단순·체계화를 통한 역할 재정립

과거처럼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만연하였던 상황에서는 다수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각기 독립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것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높은 제도운용비용, 중복지원, 투명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금융지원제도는 단순·체계화의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탁보증방식의 신용보증제도는 이차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나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에 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신용보증제도를 앞의 지적대로 개편한 후에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은행과 기업의 상생구조 정립

은행이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한 후 이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하는 등 금융의 선도기능 강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동시에 이들 중소기업은 은행의 주요 수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금융서비스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잠재력은 있으나 경영관리 능력 등이 미흡한 신생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자금 공급과 더불어 경영지원 서비스 등화 제공하게 되면 단순히 자금만 제공하는 거래 금융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중소기업의 리스크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 고객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장기 고객관계가 확립되면 은행과 중소기업간 미래 수익의 공유도 가능해져 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

4)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

현재 기술평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기술평가의 신뢰도도 부족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계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에 더 큰 애로를 겪기 마련이다. 기술평가정보 공유 미흡 및 기술평가 전문인력 부족, 그리고 기술평가기관별로 생산하는 보고서가 평가내용 및 수준 등의 면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동시에 기술평가의 신뢰도 부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평가가 활성화되고 아울러 기술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이 창업 및 사업화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불확실한 사업화 가능성 때문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발굴이 촉진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평가의 표준화 및 기술평가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해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벤처캐피탈, 팩토링 등 중소기업자금 공급원의 확충

우리나라의 경우 사모펀드(privae equity intermediary)의 일종인 벤처캐피탈펀드의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외국에 비해 팩토링, 리스 등이 중소기업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이다.

특히 팩토링의 경우 소구권이 없는 팩토링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외상매출채권(받을어음+외상매출금)의 현금화와 관련하여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팩토링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기능이 미약한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효과적으로 방치할 수 있는 소구권이 없는 팩토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련 신용정보 및 신용도 평가에 유용한 공공정보 등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도적으로 집중되는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신용정보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창업자금의 공급 확대 및 효과적 지원

창업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창업 후 6개월~3년 기간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은 창업기업들이 기술개발을 마치고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여 생산 및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도 외환위기 이후 창업자금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감과 아울러, 특히 창업 후 6개월~3년 기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업기업의 발전단계로 볼 때, 창업 후 6개월~3년이 소위 창업기업에게 있어 '죽음의 계곡'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창업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유망산업 분야, 그리고 도입기 및 성장기 단계의 기술집약형 신기술 창업에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시장실패의 보정,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 해소,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민간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신용할당(credit rationing)문제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민간금융의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과소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혹은 부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위축 시기에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욱 급속하게 축소됨으로써 경영불안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처하고, 자금시장의 순환과정에서의 원활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적정규모로 꼭 필요한 기업에 투입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대전광역시에서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을 통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대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공급을 확대한다면, 더욱 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책자금의 성과목표는 성과관리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별 사업목적과 지원방식, 지원분야 등을 차별화하여 성과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시 정책자금 지원규

모의 적정성, 분야별 균형 등 지원 원칙의 객관성과 형평성,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예산의 전반적인 구성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자금의 설계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자금의 사업적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연차별로 목표와 지표를 도출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해당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지속적인 정책자금의 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자금의 성과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측정과 입증의 가능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이 아니라 정책자금의 지원성격이나 지원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의 성과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부서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정책자금이 입안·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셋째, 중소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대응능력이 취약하여 침체기에는 외부 금융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기업들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융자조건 및 상환기간을 기업실정에 맞도록 다단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지원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중에 많이 언급되는 것은 각종 지원서류의 간소화이다. 각종 심사를 위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또한 심사기간이 길어서 시급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해 One-Process(원 프로세스) 대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특화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즉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

는 업종에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며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금융 운영형태는 크게 보조금-융자-출자-투자의 사이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금융은 주로 기술개발과 관련된 보조금과 융자부문이 대부분이었는데 OECD국가들의 경우 출자나 투자형태의 주식형 기술금융지원보다는 융자 등의 부채형 기술금융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출자 및 투자형태는 민간 기술금융시장에서 조달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초기 R&D 보조금이나 개발자금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2차적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연계된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신용대출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협력은행의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용대출 관계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신용보증기관과의 MOU 체계를 통해 우량소기업 신용보증차등화, 기업규모에 대한 이차보전을 차등화, 생산성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방식에서 현행 이차보전제도를 개선하여 다단계 차등지원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기업과 우수기업, 자금신청 횟수, 상환기간의 확대·연계 등 지원내용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고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역마다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자체 및 지방중소기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소기업,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모두가 총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은 유망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때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보

다는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지자체의 전체적인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의 지원분야 및 방법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사한 사업에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자금은 R&D와 시설자금과 관련해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육성자금 등은 지자체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자금으로 특화되어 지원되고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융위원회(2008), “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 (보도 설명자료), 2008.6.
- 김기희(2010), 「대전지역 중소기업 경영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 중소기업체 중심,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0-10. 2010.11.
- 김선기·박희정(1999),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99.
- 김필현(2010),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10-13. 2010.
- 김현욱(2004),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4-05, 004.12.
- 김현욱(2005),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96호), 2005.8.
- 박재필·정재호(2007),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7-21, 2007.12.
- 박형창(2008), 「전라북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배분기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전발연 2008-R-15, 2008.10.
- 양현봉·조덕희·박종복(2009),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 -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54호, 2009.12.
- 이민호(2008),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 지원의 효과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2호, 2008 여름.
- 이종욱(2010),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 정형권(2009),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제2호, 2009.8.
- 조덕희(2008), “중소기업정책의 당면 문제점과 성과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00호 (2008-26), 2008.6.23.
- 조덕희·양현봉(2008),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8-101, 2008.12.
- 조덕희·양현봉(2010), 「제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과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572, 2010.12.
- 조영삼(2006),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시급”,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97호 (2006-14), 2006.7.4.

조영삼(2008),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08-232, 2008.1.

조이현(2005),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모형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5-19, 2005.12.

조이현·신기철(2008),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8-02, 2008.12.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10-12, 2010.12.

Jorengson. D. W.,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1963, 247~259쪽.

부 록

설문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업 종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의 중장기 발전정책 연구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의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어 귀하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귀하의 성실하고 귀중한 답변이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

조사기관 : 대전발전연구원,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연락처 : 책임연구위원 김기희(☎ 530-3519, FAX 530-3528)

면접원	이 름	연 락 처	응답자	연 락 처
정 보			정 보	

일 반 현 황

1. 정책지원금 용자실적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지원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경영안정지원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매출액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 인력현황(연평균총인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 규 직	명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명

4. 용자받은 지원금으로 채용한 신규인력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 규 직	명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명

정책자금 만족도

5. 용자받은 지원자금을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 복수응답 가능)

- ① 시설자금 ② 인력확보 ③ 직원 교육훈련 ④ 기술개발
 ⑤ 원자재 등 재료비 ⑥ 판로개척 등 마케팅 ⑦ 제품생산
 ⑧ 수출관련 ⑨ 홍보 등 판촉활동 ⑩ 일반관리비
 ⑪ 기타 () ⑫ 기타()

6. 인건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습니까? (해당되는 항목 복수응답 가능)

- ① 기존인력 인건비 보전 ② 신규 정규인력 채용
 ③ 신규 임시직 등 비정규직 채용 ④ 인턴사원 채용
 ⑤ 기타 ()

7.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응답척도로 체크)

항 목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시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효과가 매우 큼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충분					
용자받은 자금을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7-1. 현재 지원하고 있는 자금을 대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현재규모	희망 지원규모			
경영안정자금	1,000억	① 1,000억	② 1,500억	③ 2,000억	④ 2,500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억	① 300억	② 500억	③ 700억	④ 1,000억
구매조건생산자금	100억	① 100억	② 200억	③ 300억	④ 400억

8. 용자받은 지원자금을 운용한 결과 귀사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항 목	① 전혀 없다	② 대체로 작다	③ 보통	④ 대체로 크다	⑤ 매우 크다
생 산					
매 출					
고 용					

8-1.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많은 기업이 활용하도록 현재 업체당 3회 제한(최대 6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① 1회 제한 ② 2회 제한 ③ 3회 제한 ④ 4회 제한
 ⑤ 횟수제한 없이 용자후 1년 경과 후 재용자
 ⑥ 기타()

9. 용자받기 전과 후의 생산·매출·고용면에서의 변화를 비교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자금지원(투자) 전 1년 평균	자금지원 투자 후 1년 평균
생산액 (1년 평균)	백만원	백만원
매출액 (1년 평균)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력 (1년 평균)	명	명

정책자금 지원시책 평가

10. 정책자금 지원시책 중에서 불만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불만입니까?

- ① 대출기간이 단기 ② 대출금리가 높음 ③ 자금지원정보 부족
- ④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복잡 ⑤ 실적위주의 평가기준
- ⑥ 투자보다 용자위주 지원 ⑦ 자금지원규모 부족 ⑧ 담보 부족
- ⑨ 기타(_____)

11. 시급한 자금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신용보증지원 확대 ② 운전자금지원 확대
- ③ 판로개척·마케팅·판촉 등 지원 확대
- ④ 시설자금지원 확대 ⑤ 무역금융지원 확대 ⑥ 만기대출금 상환연장
- ⑦ 상업어음할인 확대 ⑧ 어음보험지원 확대 ⑨ 부도어음 상환요구 자제
- ⑩ 기타(_____)

12.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우선 배분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재무상태(생산성, 안정성, 성장성) ② 기술성(기술개발실적, 기술인증도)
- ③ 기업경영능력(품질인증 등) ④ 사업전망(중점지원업종 여부 등)
- ⑤ 신용상태(연체, 부도, 권리침해 여부 등)
- ⑥ 기타(_____)

13. 은행에서 자금대출시 가장 불만인 사항은?

- ☞ 불만이 큰 순서로 2개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신용대출곤란 및 담보요구 ② 쪼기 요구가 심함 ③ 대출금리가 높음
- ④ 대출규모가 적음 ⑤ 어음할인이 곤란 ⑥ 담보평가비율이 낮음
- ⑦ 담당자 재량권 부족 및 의사결정이 늦음 ⑧ 거래절차가 복잡

- ⑨ 정보제공서비스 부족 ⑩ 담당자의 불친절 및 반대급부 요구
- ⑪ 기타(_____)

14. 향후 대전시는 어떤 목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가장 중요한 순서로 2개만 선택 (1순위 :) (2순위 :)
- ① 창업지원 ② 기술개발 ③ 생산성 향상(공정개선, 자동화 등)
- ④ 신규설비 투자 ⑤ 기술인력 양성 ⑥ 운전자금 등 경영안정
- ⑦ 해외투자 및 수출 촉진 ⑧ 기타(_____)

대전광역시에 건의할 사항

☆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정책연구보고서 2011-05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5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042-530-3519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TEL 042-000-0000 FAX 042-000-00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